



최수영

#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인 쇄 2007년 12월 29일  
발 행 2007년 12월 29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봄 (2275-532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2285-0936)

가 격 6,000원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 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 최수영. -- 서울 : 통일연구  
원, 2007  
p. ; cm. -- (연구총서 ; 07-07)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18-4 93340 : ₩6,000

322.8311012-KDC4  
337.519051-DDC21

CIP2007004044

##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차

I. 머리말 .....	1
II. 북중 경제관계 확대 배경 .....	5
1.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 .....	7
2. 경제관계 확대의 정치적 배경 .....	10
3. 경제관계 확대의 경제적 배경 .....	15
III. 북중 무역의 현황과 특징 .....	23
1. 북·중 무역 일반 현황 .....	25
2. 무역의 형태와 변경무역 .....	33
3. 동북3성과의 무역 .....	39
4. 북·중 무역의 특징 .....	43

IV. 중국의 대북투자·지원 현황과 특징 .....	47
1. 대북투자 추이 .....	49
2. 분야별 투자 추진 현황 .....	52
3. 대북투자의 특징 .....	65
4. 대북지원 실태 .....	69
V. 북·중 경제관계 확대의 영향과 대응방안 .....	73
1. 경제관계 확대의 영향 .....	75
2. 정책적 대응방안 .....	83
참고문헌 .....	9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01

# 표목차

<표 III-1> 북한의 대중 무역추이 .....	25
<표 III-2>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비중(남북교역 제외) ....	26
<표 III-3>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 추이 .....	28
<표 III-4>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 추이 .....	31
<표 III-5> 북한의 원유 도입 실적 .....	32
<표 III-6> 북한의 곡물 도입 실적 .....	33
<표 III-7> 북·중 무역의 유형별 비중 .....	35
<표 III-8> 북한의 대동북3성 수출입 추이 .....	40
<표 III-9> 북한의 대동북3성 수출입 비중 변화 .....	41
<표 III-10> 북한의 대중 원유 수입 가격의 변화 .....	45
<표 IV-1> 중국의 대북투자 실행액 .....	49
<표 IV-2>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자원개발 분야 .....	56
<표 IV-3>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SOC개발 분야 .....	59
<표 IV-4>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제조업 분야 .....	61
<표 IV-5>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유통·운수업 분야 .....	64
<표 IV-6>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수산협력 분야 .....	65

<표 IV-7>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무상원조 ..... 70  
<표 V-1> 북한 대외무역에서 한·중·일의 비중 ..... 78



# I

## 머리말





최근 북·중 경제교류는 무역과 투자의 양면에서 모두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2005년부터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7월 1일 북한이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한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고조되고 자원 개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서 판매되는 소비재는 중국산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대북 투자 진출이 확대되는 등 최근 중국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북·중간 경제관계는 과거의 단순 교류 및 중국의 대북 지원과 같은 차원을 넘어서서 양국간 경제관계 확대를 위한 제도적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들어 중국의 대북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05년 북한과 중국은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중국의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기간에는 『북·중 경제협력 협정』이 체결되고, 양국간 『세관협력 협정』도 체결될 예정이다.

중국은 동북진흥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개혁·개방 이후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북3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동북3성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접국인 북한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통해 동북3성 개발에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하고자 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해 북한과의 물리적 연계성을 제고해 북·중 경제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북·중 경제관계의 성장에 따른 북한의 지나친 대중 의존도 심화는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을 가져올 수도 있다.

I
II
III
IV
V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 중국 동북지역의 4번째 성(省)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북·중 경제관계는 긴밀해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절대적인 중국이 어떤 이유에서든 대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북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은 북·중 경제관계 확대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최근 북·중 경제관계 확대의 배경을 다루고 있다. 북·중 경제관계의 현황과 특징과 관련해서 제3장에서는 북·중 무역을, 제4장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및 지원을 살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북·중 경제관계 확대의 영향, 그리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대응방안으로 북한 대외 경제의 다각화 유도, 남북경협의 적극 추진, 남·북·중 3국 경제협력 모색 등을 제시하고 있다.



# II

## 북 · 중 경제관계 확대 배경





## 1.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

### 가. 경제관계 침체기

북·중 관계는 1960년대 중후반 중·소 분쟁 및 문화대혁명 시기에 일시적으로 소원해진 적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혈맹’의 우의와 ‘순치’관계를 유지해 왔다. 북한과 중국은 1949년 수교하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항일투쟁의 경험, 지리적 근접성 등을 바탕으로 혈맹관계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양국관계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사상·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면이 보다 강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조건 하에서 북·중 경제관계는 양국간 정치·군사적 관계에 종속되는 한편,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양국간 불평등한 경제관계는 일반교역에도 적용되어 중국은 북한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물자를 제공하는 우호가격과 같은 특혜를 부여해 왔다. 그렇지만 북·중 교역의 특혜적 성격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1992년 이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1990년대 초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북·중 경제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2년 8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북·중 관계는 과거의 혈맹과 순치관계에 균열이 발생하고 냉각기에 접어들었다.<sup>1</sup>

북·중간의 마찰은 1993년부터 북·중 고위급 상호방문의 중단으로 귀결되면서 북·중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은 북·중

<sup>1</sup> 한·중 수교는 그 동안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북·중 수뇌급 회담의 중단 등 양국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북한외교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관계에 경제논리를 우선하면서 북한에 적용해 온 사회주의 우호가격제 및 구상무역제를 폐지하고 북한에 대해 경화결제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sup>2</sup> 이런 양국간 정치·경제관계의 악화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성장 추세에 있던 북·중무역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북·중 무역은 1993년 9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해 1999년에는 3.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나. 경제관계 확대기

북·중 경제관계가 복원되고 북·중 무역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된 계기는 1999년에 재개된 양국 고위급의 상호방문이었다.<sup>3</sup> 이 해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5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여기에서 중국은 식량 15만 톤과 코크스 40만 톤을 북한에게 무상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양국관계는 급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2000년에 들어와서 북·중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져 과거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런 북·중 밀착은 무엇보다도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양국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해 일어났다. 2000년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였고, 5월에는 북경을 방문하였다. 6월에는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중국

2- 북·중무역은 1950년에 체결된 ‘북·중 제1차 무역협정,’ 그리고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합작조약’에 따라 바터무역과 우호가격을 근간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1992년 1월 바터무역을 경화결제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북·중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3- 1990년대 중반 북·중 정부는 양국 관계 악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관계 복원에 노력하였다. 중국은 1994년부터 대북원조를 재개한 바 있고, 1996년 5월 홍성남 총리가 북경을 방문하였을 때 대북원조를 포함하는 ‘경제기술합작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는 향후 5년간 중국은 북한에 곡물 50만 톤, 석유 130만 톤, 석탄 250만 톤을 절반은 무상으로, 절반은 국제가격의 1/3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북경을 방문하였다. 이 해 10월에는 중국 부주석 겸 국방부장 츠하오펜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장쩌민(江澤民) 중국 주석이 2001년 9월 평양을 방문해 북·중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다. 2001년 평양 북·중 정상회담에서 장쩌민 주석은 ‘중북우의(中北友誼)’를 강조했고,<sup>4</sup> 김정일 위원장은 장쩌민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활동 목표로 주장한 ‘3개 대표론(선진생산, 선진문화, 광대한 인민의 이익)’을 지지했다. 이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에게 식량 20만 톤, 디젤유 3만 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북·중 양국의 경제관계 확대 노력은 2000년대 중반에도 지속되었다. 2004년 4월 2일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경제 및 무역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 자리에서 “중국정부는 중국기업이 북한 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할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천명하였다. 2005년 3월에 양국은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및 ‘환경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2005년 10월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일 위원장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에서 양국은 ‘북·중 우호관계의 발전이 전략적 방침’임을 합의했고,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과 북한기업의 투자협력을 고무하고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sup>5</sup> 이것은 양국간 경제 협력을 원조와 교역 중심에서 투자로 확대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

4- 탕지아쉬엔 외교부장은 ‘친척 돌아보기’라는 표현을 썼다.

5-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에 약 20억 달러의 장기 원조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교도통신』, 2005년 10월 29일; 중국 우의(吳儀) 국무원 부총리는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 직전인 2005년 10월 10일 방북하여 북한과 3대 중공업분야(광산개발, 제철공업, 항공개발)에 개발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홍콩 『文匯報』, 2006년 10월 30일.



할 수 있다. 2006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하여 중국 최고 권력층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을 접견함으로써 양국은 당대 당의 전통적 협력관계를 복원·유지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이런 양국 관계의 밀착은 경제관계에 반영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북·중 무역은 1999년을 바닥으로 상승추세로 바뀌어 2003년에는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이 추진된 2006년에도 북·중 무역은 증가하여 17억 달러에 육박하였다. 특히 2005년부터는 중국의 대북투자가 급격히 신장하고 있어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 2. 경제관계 확대의 정치적 배경

### 가. 북한체제 안정 유지

탈냉전기 북·중 양국은 ‘혈맹관계’가 아닌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실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협력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점차 악화되는 동북아지역 강대국간의 관계 및 북한 문제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고시켜 왔다.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미·일의 중국 견제가 중국에 있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정권의 취약성으로 인해 북한이 예상치 못한 사태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져 왔다. 중국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 동북아지역에서 완충지대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편입되거나 한반도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

는 상황은 중국의 정책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다.

중국은 2020년 ‘소강사회(小康社會)’ 달성을 위해 경제성장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대외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중국에 있어 북한은 자국의 경제개혁·개방정책과 대외정책 추진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에 처한 북한을 살리는 것, 최소한 북한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

이런 자국 이익의 확보를 위해 중국은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기존의 관망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sup>6</sup> 중국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북한을 궁지로 몰아 북한체제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2차 북핵 위기를 계기로 북·중 양국은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핵문제 이외에도 개혁·개방, 탈북자, 동북진흥계획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을 바라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방지 및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견제하는 한편,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이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

<sup>6</sup>- 중국은 2003년 초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50여회 이상 메시지 전달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변국을 6자회담에 합류하게 하였다.



## 나. 대북 영향력 확대 및 북한 선점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영향권 하에 뒀으로써 북한이 중국에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더욱 의존하게끔 만들려 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이 자국의 세력권 하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지역 패권세력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줌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무엇보다 중국은 북한이 다른 국가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향후 전개될 한반도 경제통합 과정에서 중국이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려하는지도 모른다. 북·중 경제관계 강화에 따른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급속히 심화되면서 북한경제가 중국에 예속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대북 경제전략 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북 진출이 확대되고 대북 경제적 영향력 증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북한은 중국에 잠식당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동북3성 개발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국 경제권에 편입시키려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동북4성의 하나로 만들어서 사실상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음모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북4성론 또는 위성국가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중국자본의 대북 진출이 중국 정부의 일관된 방침과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들고 있다.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004년 4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기업이 북한 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적극 장려한다.’고 표명했다.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 직전 북한을 먼저 방문한 우

이(吳儀) 부총리는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와 회담에서 향후 경제·무역과 관련해 양측 정부가 책임지고,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민간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3개 원칙에 합의했다.

중국과 북한의 밀약은 2006년 들어와서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5년 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종전의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경할 계획이다.<sup>7</sup> 원자바오 총리도 1월 김정일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경제교류 협력방침인 3개 원칙을 또 다시 천명하고,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과거 지방정부의 묵인 하에 제한적으로 민간기업이 주도하던 경제교류방식은 다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동북4성론의 또 다른 근거로는 중국이 북한을 선점하려는 목적에서 투자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북한에 진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록 짧은 기간에 북한으로부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하더라도 일단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형성될 미래시장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현재가 중국의 70년대 말 80년대 초와 비슷하며 지금 조선에 진입하는 것이 시장을 점령함에 있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중국 관리의 말은 중국자본의 북한 선점 논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up>8</sup> 중국이 동북3성 개발을 발전시켜 아예 북한경제를 자국 경제에 편입시키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북한을 선점하려 한다는 것이다.

7- 중국은 2006년부터 시작되는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에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대북 지원을 추진하기로 북한측과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교도통신』, 2006년 2월 25일.

8- 푸젠(福建)성 대외경제무역청 대표로 베이징에 근무하는 왕웨이리(王位力) 주임이 발언하였다.

I
II
III
IV
V

## 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에 따른 선택

2001년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 관계는 악화되었고, 더욱이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었다.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등으로 지칭하고 북·미간 접촉을 중단하였다. 미국은 대량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해 북한의 무기 수출과 마약 밀매 루트를 차단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면서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보복성 경제제재를 강화해 왔다.<sup>9</sup>

북한은 미국의 압박정책에 대응하여 핵동결 해제와 핵보유 선언 등 벼랑끝 외교를 펼쳤으나 결국 중국의 중재 하에 6자회담에 참가하여 ‘9·19 공동성명’에 합의하였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9·19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인권, 마약, 위조지폐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왔다.

김정일 정권은 국제적인 고립 상황에서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유대를 강화해 당면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헤쳐 나가고자 한다. 북한은 핵문제로 미·일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자 중국에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중 관계 강화를 통해 대미 협상력 제고 및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및 협력을 통해 당면한 경제난 해소와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

<sup>9</sup>-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북한선박에 대한 입항조건 및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북제재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에 따라 최근 북·일무역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중 경제관계의 확대 배경에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에만 매달리는 것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인 우호관계 및 혈맹관계,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는 한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확대보다는 중국과의 거래가 훨씬 부담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보다 전략적이고 실리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심화를 허용하고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는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sup>10</sup> 북한은 실리적인 차원에서 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지원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 3. 경제관계 확대의 경제적 배경

#### 가. 경제발전을 위한 북한 활용

최근 북·중 경제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대북 경제전략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대북 경제전략은 소극적인 경제지원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경제 재건에 적극 개입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sup>10</sup> -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 70.

중국은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자국산 원자재 공급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원자재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다. 주요 원자재의 부족에 직면한 중국은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의 대북 투자 급증은 국가전략 중 하나인 저우추취(走出去: 투자진출정책)와도 맥이 닿아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 진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북투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03년 10월 개최된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6期中全會)에서 동북3성 지역의 개발계획을 국가적 중점사업으로 확정하였다. 이 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 발표한 ‘동북지역 등 노(老)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2003』)’ 속에 동북3성 진흥계획은 구체화되었고 2004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장쩌민 정부가 서부대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추진했듯이 동북3성 진흥계획은 후진타오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05년 6월 ‘동북 노(老)공업기지의 대외개방 확대 실시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2005』)’로 추가로 내놓았다. 의견『2005』의 주요 내용은 동북3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외개방 가속화, 핵심산업 육성과 서비스 산업의 발전, 동북3성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경제 협력의 추진 등이다. 특히 의견『2005』에는 북한·중국 접경 지역 경제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대북 경제전략의 변화는 동북3성 개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동북3성은 중국의 개혁·개방 추진과정에서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한 지역이다. 중국은 동북3성을 육성하려면 인접한 북한경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시에 동북3성

개발과정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이 집중된 동북3성 지역은 발해만에 면한 랴오닝(遼寧)성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중국 경제발전에서 소외되었던 동북3성 개발은 인접국가인 북한에게는 지역경제협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과 동북3성간 운송·물류 인프라의 연결, 자원의 공동개발 및 활용과 같은 각종 프로젝트들이 본격화 될 경우, 중국 접경지역 북한 도시들의 경제 활동 및 산업생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것은 양국 접경지역의 동반성장을 통해 북한의 자원을 신속하게 동북3성으로 수송하고, 동북3성에서 생산한 제품을 북한을 통해 해외로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북·중 관계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대북 경제 전략의 변화를 ‘선의의 동반성장론’이라 설명한다.<sup>11</sup>

현 시점에서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확대가 북한과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중화경제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어쩌면 이런 논의는 비생산적이고 논의를 위한 논의에 불과할 것이다. 그 이유는 동반성장 또는 동북4성 어느 것이던 간에 그 결과는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sup>11</sup> 『동아일보』, 2006년 3월 22일.



## 나. 동북3성 진흥계획과의 연계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은 이 지역의 자본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체된 국유기업 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하며, 실업증가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도 해소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sup>12</sup> 동북3성 지역의 기업들은 개혁·개방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수익성 악화 및 도산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왔다. 산업구조 및 제품의 노후, 낙후된 기술, 기업관리의 경직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지역은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특히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 안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동북3성 개발계획은 이 지역 국유기업 지원 및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 조세 및 재정지원, 국유기업 구조조정 등 3가지로 구체화되고 있다. 동북3성 개발전략의 특징은 ①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모두 2010년까지 노후한 공업기지를 전면 개선한다는 취지 아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② 동북3성 모두 자신의 지역적 비교우위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과 함께 중점산업으로 농산물 가공업을 제시하며, ③ 동북3성 모두 체제 혁신 및 국유기업 개혁을 개발전략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과 더불어 동북3성은 자원, 교통, 지정학적 위치, 축적된 산업자원 및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공동체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랴오닝성과 지린성은 동북지역 경제의 공동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린성의 경우 노후한 공업기지 개조를 가속화하는 대책으로 동북 경제권간 상호 의존 및 공동 발전을 제시하면서 대외개방전략 속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철도, 고속도로, 수로, 공항, 항구 등)의 효

---

<sup>12</sup>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중국경제년보』, (서울: 대외정책연구원, 2004), p. 110.

을적 활용을 위한 각 성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이 2004년 들어와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북공정’은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와의 정치적 안정 도모 및 경제교류 확대라는 의미를 내포한다.<sup>13</sup> 중국 발전전략상 자체 필요성에 의해 입안·추진되고 있지만 동북3성 개발계획은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동북3성 개발이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 지역 개발을 통해 동북3성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중공업 제품의 수입대체효과가 제고될 경우 한국의 비교우위도 사라져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

동북3성 진흥계획은 후진타오 체제의 중장기 발전전략인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1차 5년(2006년~2010년)의 계획 강요’ 속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동북부의 동벤티다오(東邊道) 철도와 성과성 사이 도로, 운수, 통로 등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일체화를 촉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북3성도 각각 성별 11차 5개년 계획에서 의견『2005』와 중앙정부의 11차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북·중 경제협력의 기반이 되는 개발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라오닝성과 지린성은 의견『2005』의 내용을 성별 11차 5개년 계획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2005년 6월 중국 국무원 판공처 결정에 따라 동북3성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접경지역인 북한의 신의주와 라진·선봉지대가 동반 성장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4</sup> 중국은 라진항의 사용권을 확보하였고,

<sup>13</sup>- 김주영, 『중국의 동북3성 재건과 우리의 진출방향』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4), pp. 32~36.

<sup>14</sup>- 2005년 6월 공포된 중국 국무원 판공처 제36호 문건 『동북노공업기지의 대외개방 확대에 대한 실시의견』의 내용에는 ① 국유기업의 개혁, 공공사업에 대한 외자도입 촉진, 국경지역의 경제 활성화, 취업문제 해결 등 동북진흥의 촉진과 관련된 중국정

라진항에서 중국 국경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정비하여 동북3성에서 동해로 통하는 물류루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헤이룽장성 무단장(牡丹江)에서 출발해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북한 접경지대를 거쳐 단둥(丹東)과 다롄(大連)에 이르는 총 1,380km의 동벤다오 철도를 2008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이 공사는 낙후한 동북3성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단둥시는 발전계획위원회 보고서(2005. 8. 10)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인프라 건설과 수출가공구 조성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계획에는 중국과 북한을 잇는 차량전용도로인 압록강대교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의견『2005』의 후속조치이다.<sup>15</sup> 지린성의 경우에도 두만강 개발계획, 훈춘-나선의 도로, 항만, 지역 일체화(路港區一体化), 변경무역과 호시무역의 발전 추진 등을 제11차 5개년 계획에 담고 있어 북·중 경제협력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 다. 200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1998년 김정일 체제의 공식 등장 이후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혁명적 경제전략의 축소와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나타났다. 김정일이

---

부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고, ② 중국이 대외원조를 행하는 경우 동북지방의 국경을 접하는 도로와 공항 등 인프라건설 프로젝트를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방침도 수립하고 있다.

<sup>15</sup> - 실시의견의 내용에는 ① 국유기업의 개혁, 공공사업에 대한 외자도입 촉진, 국경지역의 경제 활성화, 취업문제 해결 등 동북진흥의 촉진과 관련된 중국정부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고, ② 중국이 대외원조를 행하는 경우 동북지방의 국경을 접하는 도로와 공항 등 인프라건설 프로젝트를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방침도 수립하고 있다.

I
II
III
IV
V

제시한 경제발전 전략은 완충기의 혁명적 경제전략(농업·경공업·무역의 3대제일주의)을 대체하는 혁명적 경제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다. 혁명적 경제정책의 핵심은 농업과 선행부문(석탄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 및 금속공업을 정상화시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다.<sup>16</sup>

북한은 2002년 시장주의 원리를 일부 포함하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를 단행하였다. 「7·1조치」를 통해 북한은 분배에서의 평균주의를 타파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국가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하고자 하였다. 2002년 하반기에는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를 특구로 지정해 개방지역을 확대하면서 해외자본 유치에 적극성을 보여 왔다. 북한은 「7·1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경제개선(개혁) 조치를 내놓고 있다.

이런 경제개혁 조치가 경제난 해소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북한은 생산성 증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내부 자원이 고갈된 상태이다. 따라서 경제개혁 조치 이후 북한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북한의 노력은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여전히 체제유지에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은 2004년부터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2004년 1월에 ‘개성고려인삼 프레스간담회’를, 5월에는 ‘제7회 평양국제상품전’을 개최하였다. 10월에는 중국수출상품교역회(Canton Fair)에 38인의 대표단

<sup>16</sup> 북한은 2000년,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사회주의 경제강국(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농업생산을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 고리’로,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전선’으로 설명하는 있다. 특히 전력공업을 사회주의 건설의 전초선이라 하면서 투자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을 파견하였고,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OKTA)와의 평양 무역상담회를 통해 해외동포들의 대북 투자 유치에 나서는 등 중국을 포함한 외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노력해 왔다.<sup>17</sup>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북한의 투자환경은 대단히 열악해 대부분 선진국들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전반적인 북한의 투자환경은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시설, 높은 물류비용, 생산제품의 판로 제한 등으로 외국투자자를 유치하기에는 매우 불리하다. 체제의 경직성에 따른 기업경영에서의 제한 및 법·제도의 성실한 집행에 대한 우려 등도 외국인 투자 유치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핵문제와 같은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도 북한을 투자 대상국에서 사실상 제외시켜 왔다.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북한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과거 혈맹관계를 복원하고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외자유치는 중국에 더욱 의존하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 2005년 3월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의 중국 방문 기간에 북·중간에는 「북중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

<sup>17</sup> - 2004년 10월 평양-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 무역상담회에서 김용술 무역 부상은 해외동포들의 대북 투자를 촉구하였다. 여기에서 김용술은 북한 노동자 최저 임금을 80~120달러에서 37.23달러(30유로)로의 대폭 인하 및 각종 사용료 인하 등의 추진을 공언했다. 『문화일보』, 2004년 12월 30일.

# III

## 북·중 무역의 현황과 특징





# 1. 북·중 무역 일반 현황

## 가. 북·중 무역 추이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1990년대 초부터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1990년대에는 25~3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렇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대북 우호가격제 폐지 및 경화결제 요구,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적 여론 악화, 북한 산업의 생산 활동 저하 등으로 1999년에 북·중 무역은 최저 수준인 3.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III-1> 북한의 대중 무역추이

(단위: 천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8	57,313	-33.5	355,705	-52.9	413,018	-37.1	-298,392
1999	41,709	-27.2	328,660	-7.6	370,369	-10.3	-286,951
2000	37,214	-10.8	450,824	37.1	488,038	31.8	-413,610
2001	166,797	348.1	570,660	27.1	737,457	51.1	-403,863
2002	270,685	62.3	467,309	-18.1	737,994	0.1	-196,624
2003	395,344	46.1	627,583	34.3	1,022,927	38.6	-232,239
2004	585,703	48.2	799,503	27.4	1,385,206	35.4	-213,800
2005	499,157	-14.8	1,081,184	35.2	1,580,341	14.1	-582,027
2006	467,718	-6.3	1,231,886	13.9	1,699,604	7.5	-764,168

자료: KOTRA, 무역협회 KITA. NET.

I  
II  
III  
IV  
V

2000년대 들어와서 북·중 교역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2000년과 2001년 북·중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양국간 관계개선 노력이 무역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북·중 무역의 증가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6년 북·중 교역액은 16억 9,960만 달러로 2000년 4억 8,803만 달러의 3.5배를 기록하였다. 북한의 전체무역(남북교역 제외)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0년 24.7%에서 2006년에는 56.7%로 급증하였다. 2006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4억 6,772만 달러로 전년 대비 6.3% 감소하였으나 대중 수입은 12억 3,189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해 북·중 무역은 7.5% 증가하였다.

북한의 대중 교역수지는 2000년대 들어와서도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00년과 2001년 4억 달러 수준에서 2004년까지는 2억 달러 내외로 축소되었다. 이후 적자규모는 다시 확대되어 2005년에는 5억 8,203만 달러, 2006년에는 7억 6,417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북한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대중 무역적자의 비중은 2000년대 초반(2000년 49.2%)에 비해 2002~2004년(2004년 26.2%)에는 대폭 축소되었으나 2006년에는 거의 70%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표 III-2>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비중(남북교역 제외)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비중 (%)	28.6	25.0	24.7	32.5	32.7	42.8	48.5	52.6	56.7

자료: KOT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호.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에는 북·일 관계 악화 및 북핵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축소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북·일 관계 악화로 대일 주력 수출품목인 어패류, 섬유(피복류 위탁가공), 채소 등의 수출선을 중국으로 전환하여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였다. 또한 2002년 북한의 핵개발 시인에 따른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로 대북 통상제제가 강화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원조가 감소함에 따라 북한은 식량 및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 나. 수출입 품목구조의 변화

### (1) 수출품목구조

북한의 대중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자원, 광물성 연료와 철강, 아연, 어패류, 목재 등의 기초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다. 2006년 대중 10대 수출품목(HS Code 두자리)은 광·슬랙 및 회(HS Code 26), 광물성연료·광물유(HS 27), 의류 및 부속품(62,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외), 어패류(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철강(72), 나무·나무제품·목탄(44), 기타특수품목(98, 기타교역), 식용과실·견과류(08), 아연과 그 제품(79), 알루미늄과 그 제품(76) 등이다.

I

II

III

IV

V

<표 III-3>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 추이

(단위: 천 달러,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어패류	2,748 (4.79)	5,755 (13.80)	4,047 (10.87)	47,977 (28.76)	143,016 (52.80)	206,931 (52.34)	261,806 (44.71)	92,432 (18.52)	43,266 (9.25)
광· 슬랙	5,946 (10.37)	2,415 (5.80)	2,607 (7.01)	6,434 (3.86)	8,537 (3.15)	14,963 (3.78)	60,114 (10.27)	95,066 (19.05)	118,425 (25.32)
광물 연료	7,889 (13.76)	2,339 (5.61)	3,416 (9.18)	4,318 (2.59)	11,295 (4.17)	17,250 (4.36)	53,100 (9.07)	111,855 (22.41)	102,344 (21.88)
목재 나무 제품	15,853 (27.66)	13,837 (33.18)	9,926 (26.67)	4,654 (2.79)	9,425 (3.48)	13,725 (3.47)	15,247 (2.60)	15,050 (3.02)	26,593 (5.69)
방직 섬유 제품	1,190 (2.08)	968 (2.32)	2,584 (6.94)	28,508 (17.09)	43,137 (15.93)	57,637 (14.58)	55,762 (9.51)	67,253 (13.47)	72,247 (15.55)
철강	10,511 (18.34)	9,750 (23.38)	8,662 (23.28)	23,670 (14.20)	27,860 (10.29)	46,794 (11.84)	75,925 (12.97)	72,596 (14.54)	35,249 (7.54)

주: 어패류(HS 03), 광·슬랙(26), 광물연료(27), 목재·나무제품(44~46), 방직섬유·제품(50~63), 철강(72)

자료: KOTRA, 무역협회 KITA.NET.

어패류와 철강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북한의 대중 수출은 2년 연속 감소하였다. 어패류(03)는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2001년부터 대중국 수출 증가를 이끌어 왔다. 어패류는 전체 대중국 수출액에서 2002년 52.8%, 2003년 52.3%, 2004년 44.7%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4년까지 최대 수출품이었던 어패류는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2년 연속 크게 수출이 감소(2005년 64.7% 감소, 2006년 53.2% 감소)해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06년 9.3%로 줄어들었다. 철강의 대중국 수출액은 200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과 2005년 수출액은 각각 7,593만 달러, 7,26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2006년에는 수출액이 3,525만 달러로 줄어들어 수출 비중도 7.5%에

그쳤다.

광, 슬랙 및 회(26)의 대중 수출액은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비중도 2003년 3.8%에서 2006년에는 25.3%로 높아져 대중국 제1의 수출품목이 되었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광, 슬랙 및 회(26)의 주요 구성품목은 철광석이다. 북한은 중국에 철광석(HS 2601)을 수출해 왔지만 2003년 이전까지 수출액은 천만 달러 이하로 대부분 2차 가공 이후의 철강제품 형태로 수출해 왔다. 그렇지만 2004년부터 철광석 수출이 급증하면서 2005년에는 수출액이 6,6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철광석의 수출 확대는 중국기업이 북한 무산광산에 투자하고 대가로 가져오는 물량을 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광물성연료(27)의 대중 수출액은 2004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과 2006년에 22% 내외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유가급등에 따른 중국 내 대체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무연탄의 대중 수출단가 상승으로 북한 주력 수출상품의 하나인 무연탄의 대중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동시에 1990년대 중후반 수해를 입었던 북한의 탄광이 생산 정상화 과정에 접어들어 수출 여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50~63)의 대중 수출액은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중 수출품의 대부분은 의류·부속품(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제외: 62)으로 2006년 수출액은 6,334만 달러이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조를 거친 제품으로서 북한의 제조업에서 방직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나무 및 그 제품(HS 44~46)은 2000년까지 북한의 대중 제1수출 품목이었으나 최근 수출비중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 제품군



중 나무, 나무제품, 목탄(HS 44)이 대중 수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대중 수출에서 알루미늄과 그 제품(76), 유리제품(70)의 대폭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 유리제품의 경우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물량 전부가 판유리(HS 7005)인 것으로 볼 때, 중국 측의 무상원조를 통해 준공된(2005. 10. 9) 대안친선유리공장의 운영이 정상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추측된다.<sup>18</sup>

## (2) 수입품목구조

북한의 대중 주요 수입 품목은 산업생산에 필요한 연료와 기계·철강, 식용육류와 곡물, 그리고 생필품인 전기기기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이다. 이와 같이 중국은 북한의 산업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부자재와 소비재의 가장 중요한 제공국이다. 2006년 대중 10대 수입품목(HS Code 두자리)은 광물성연료·광물유(HS 27), 식용육류(02), 전기기기 및 부분품(85),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84), 플라스틱 및 그 제품(39), 인조필라멘트섬유(54), 차량 및 그 부속품(87), 철강(72), 제분공업의 생산품(11),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생산품(15)으로 나타났다.

---

<sup>18</sup> - KOTRA, 『2006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 33.

<표 III-4>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 추이

(단위: 천 달러,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식용 육류	2,828 (0.80)	1,265 (0.38)	1,474 (0.33)	6,701 (1.17)	10,372 (2.22)	63,623 (10.14)	140,575 (17.58)	104,219 (9.64)	111,868 (9.08)
곡물	51,433 (14.46)	43,706 (13.30)	34,049 (7.55)	62,621 (10.97)	29,910 (6.40)	49,961 (7.96)	15,388 (1.92)	49,811 (4.61)	16,853 (1.37)
제분 제품	24,863 (7.00)	10,096 (3.07)	6,886 (1.53)	10,858 (1.90)	10,044 (2.15)	8,092 (1.28)	14,539 (1.82)	24,096 (2.23)	27,466 (2.22)
광물 연료	84,790 (23.84)	79,499 (24.19)	117,893 (26.15)	161,800 (28.35)	117,969 (25.24)	180,727 (28.80)	204,657 (25.60)	285,714 (26.43)	347,483 (28.21)
방직 섬유 제품	24,448 (6.88)	22,288 (6.78)	49,273 (10.93)	49,944 (8.75)	38,572 (8.25)	40,456 (6.45)	48,140 (6.02)	81,684 (7.56)	100,304 (8.14)
기계류 전기 전자	16,333 (4.59)	24,562 (7.47)	35,457 (7.86)	46,550 (8.16)	56,921 (12.18)	66,624 (10.62)	85,975 (10.75)	133,306 (12.33)	180,624 (14.66)

주: 식용육류(HS 02), 곡물(10), 제분제품(11), 광물연료(27), 방직섬유·제품(50~63), 기계류·전기전자(84, 85)

자료: KOTRA, 무역협회 KITA.NET.

광물성연료, 광물유(27)는 북한의 대중 수입비중이 가장 큰 제품군이다. 광물성연료, 광물류의 수입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수입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비산유국인 북한은 원유(HS 2709)를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의 경우 도입량은 큰 기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수입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6년의 대중 원유도입량은 2005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나 수입액은 국제 원유가 및 연료 가격의 상승에 따라 25% 정도 늘어났다.



<표 III-5> 북한의 원유 도입 실적

(단위: 만 톤,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 체	60.9	31.7	38.9	57.9	59.7	57.4	61.3	52.3	52.4
중 국	50.3 (82.6)	31.7 (100.0)	38.9 (100.0)	57.9 (100.0)	47.2 (79.1)	57.4 (100.0)	53.2 (86.8)	52.3 (100.0)	52.4 (100.0)

주: ( )내는 북한의 전체 도입 실적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임.

자료: KOTRA, 『2006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pp. 23, 26, 35.

기계류, 전기전자기기 및 부속품(HS 84, 85)의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84)와 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및 부분품(85)이 포함되어 있는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대부분 기계류와 전기기기를 수입한다. 2006년 기계류의 수입액은 8,304만 달러, 전기기기의 수입액은 9,758만 달러로 이들 두 제품군의 수입비중은 14.7%를 차지하였다. 최근 기계류의 대중 수입 증가는 중국의 대북 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설비의 도입 증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HS 50~63)의 수입비중은 2006년 8.1%로 나타났다. 이 제품군에서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된 품목은 인조 필라멘트섬유(54)와 인조스테이플섬유(55)이다.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식용육류(02), 곡물(10), 제분공업의 생산품(11)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식용육류의 수입은 2003년부터 급격히 늘어나 2004년에는 수입비중이 17.6%를 차지하였다. 2005년과 2006년에도 식용육류의 수입액은 1억 달러 이상, 수입비중은 9%이상을 차지하였다. 제분제품의 수입액은 지난 수년간 다소 증가해 2006년의 수입비중은 2.2%로 나타났다.

<표 III-6> 북한의 곡물 도입 실적

(단위: 만 톤,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 체	111.2	107.0	122.5	140.0	100.5	80.9	58.1	86.0	10.0
중 국	28.8 (25.9)	23.8 (22.2)	28.3 (23.1)	43.6 (31.1)	21.9 (21.8)	34.9 (43.1)	9.0 (30.0)	33.1 (38.5)	7.9 (79.0)

주: ( ) 내는 북한의 전체 도입 실적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임.  
 자료: KOTRA, 『2006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pp. 23, 26, 35.

북한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곡물을 수입하고 있지만 2004년과 2006년 곡물도입량은 10만 톤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 곡물은 2003년까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다. 2006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은 7.9만 톤으로 1991년 이래 가장 적은 양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전체 곡물 도입실적에 포함된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을 제외할 경우, 개별국가 차원에서 제공되는 곡물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 2. 무역의 형태와 변경무역

### 가. 형태 및 유형별 비중

북·중 무역은 중국의 기준에 의하면 일반무역, 변경무역, 가공무역, 보세무역, 무상원조, 기타 등 6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이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무역, 변경무역, 보세무역이다. 특히 북·중 무역의 유형 중에서 주목할 것은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보세무역의 비중이 매우 높고, 대중 수입에서는 일반무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점이다.

I
II
III
IV
V

일반무역은 통상 국가간 일반적인 교역절차에 따라 경화결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변경무역은 중국정부가 변경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에게 인근 국가들과의 교역에 있어 세제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보세무역은 중국을 단순 통과하여 제3국으로 수출되거나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북한으로 들어가는 중계무역으로 중국의 중간상인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되어 수출입 거래에 개입하는 형태이다.

2005년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변경무역이 36.4%로 그 비중이 가장 높고, 일반무역(29.6%)과 보세무역(29.1%)은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일반무역은 최근 2004년과 2005년에 그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중 수출에서 무연탄과 철광석의 수출 증가가 주로 일반무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세무역은 북한산 제품이 중국세관을 단순 통과하여 제3국으로 최종 수출되는 것으로 주요 품목은 어패류 및 섬유제품이다.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보세무역의 비중은 2002년과 2003년에는 약 70%, 2004년에는 54.8%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에는 29.1%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것은 어패류의 가격 하락으로 중국을 통한 한국, 일본 등 제3국으로의 수출실적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중 수입에서는 일반무역이 60~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인 변경무역은 20% 내외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 일반무역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북한 당국의 수입계획에 따른 대중국 물자조달이 일반무역 형태를 띠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up>19</sup>

---

<sup>19</sup> -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 105.

북·중 교역은 주로 북한과 중국 동북3성의 변경도시를 통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히 변경지역에서 일어나는 형태를 띠고 있다. 2002년 하반기 이후 북핵문제와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됨으로써 동북3성의 변경도시를 거쳐 거래되는 북·중 교역은 증가 추세이다. 북한과 동북3성간 교역은 랴오닝성 단둥과 지린성 옌벤(延邊)지역, 훈춘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의주-단둥 경로가 북·중 교역의 약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표 III-7> 북·중 무역의 유형별 비중

(단위: %)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	2002	2003	2004	2005
일반무역	5.8	3.3	5.3	12.8	29.6	60.8	64.3	68.7	70.8	62.8
변경무역	24.0	20.3	20.6	26.7	36.4	20.4	21.3	18.3	18.0	24.0
가공무역	12.7	4.1	2.6	3.7	4.2	4.6	4.8	7.2	4.4	4.8
보세무역	56.9	70.8	70.4	54.8	29.1	1.5	4.1	3.3	2.6	4.0
무상원조	-	-	-	0.0	-	12.1	3.4	1.7	1.7	3.5
기 타	0.6	1.5	1.1	2.0	0.6	0.5	2.2	0.9	1.8	0.9

자료: 중국해관총서 통계사.

## 나. 북·중 변경무역

중국 정부는 자국의 변경지역 발전을 위해 변경무역이란 제도를 만들었다. 중국 법률규정에 의한 변경무역은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변경소액무역’, ‘변경호시무역’ 및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sup>20</sup> 북·중 교역에서 수출입 모두 변경무역의 비중이 높는데 이것은 중국이 변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변경무역에 대해 여러가지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변경무역을 통한 북한의 대중 수출은 20% 이상을 차지하였고, 대중 수입은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변경소액무역기업이 지정된 통상구를 통해 원산지가 인접국가인 상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관세 및 증치세(부가가치세)를 각각 50% 감면해 주고 있다.<sup>21</sup>이에 따라 북한이 변경무역을 통해 중국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일반무역보다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변경무역을 통한 북·중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랴오닝성과 지린성 정부는 2003년 변경무역 관련 세제 감면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했고, 2004년 하반기 들어 북·중간 변경무역에 주어지던 세제 감면 혜택이 축소·폐지되고 있다.<sup>22</sup>

변경호시무역의 경우 거래상품은 생활용품에 국한되어 있고, 1인당 하루에 3,000위안 이하의 거래에 대해 수입 관세와 증치세를 면세하고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sup>23</sup> 변경지역의 대외경제기술합작경영권을 보유한 기업이 이웃국가 변경지역

---

<sup>20</sup>- 중국은 1980년대 들어 변경무역을 관한 법제 정비를 본격화하기 시작해 우선 1984년 12월에 『변경소액무역 잠정관리방법』을 제정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1996년 4월에 『국무원 변경무역에 관한 문제에 대한 공고』, 1996년 3월에 『국경지역 주민 호시무역 관리방법』, 그리고 1999년 1월에 『변경무역의 발전에 관한 보충규정 공고』 등을 발표하였다.

<sup>21</sup>- 변경소액무역은 변경소액무역경영권을 갖고 있는 국경지역의 기업이 국가가 지정한 육상국경통상구를 경유하여 인접국의 국경지역 기업 또는 그 밖의 무역기관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활동이다. 중국의 평균관세율은 12%, 평균 증치세율은 17% 정도이다. 변경무역의 세제 감면 제외품목은 담배, 술, 화장품, TV, 촬영기, 비디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공제시스템교환기, 마이크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화기, 무선호출시스템, 팩스기, 전자계산기, 타자기 및 문자처리기, 가구, 주방용품, 음향설비, 자동차 및 부품 등이다.

<sup>22</sup>- KOTRA, 『경제속보』, 2004년 10월 29일.

<sup>23</sup>- 변경호시무역은 국경지역의 주민이 국경선 20km 이내의 지역에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개방지역' 또는 '지정시장'에서 정해진 범위 내의 금액, 수량의 상품교역 활동이다.

을 경유하여 경제합작을 진행하여 수입한 상품은 변경소액무역의 수입 세수정책을 적용받고, 공사수주 및 노동력 합작 업무의 대가로 받은 물자는 항목에 따라 반입할 수 있고 경영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sup>24</sup> 또한 변경지역과 경제기술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대가로 받은 접경 국가 원산지 물자는 프로젝트에 따라 임의로 반입할 수 있다.

북·중 무역에서 변경무역은 교역량, 거래품목 수, 참여기업 수 등에 있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변경무역은 단둥, 지안(集安), 창바이(長白), 투먼(圖門) 등 중국 측 10여개의 세관인 통상구(通商口, 口岸이라고도 함)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변경무역의 중심지역은 랴오닝성의 단둥시와 지린성 연변자치주 지역이다. 단둥을 통한 변경무역은 1990년대 말부터 크게 증가하여 연변지역을 통한 변경무역액을 초과하였고,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sup>25</sup>

북·중 무역의 최대 창구인 단둥세관은 신의주, 평양, 남포 등 북한의 인구 밀집지역인 서부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운송인프라도 정비되어 있어 양국간 무역에 있어 매우 유리하다. 북한당국의 대외무역 허가를 받은 무역회사와 중국정부에서 부여하는 대북 변경무역권한을 가진 기업들은 주로 이들 도시(단둥 및 연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단둥에는 북한당국의 대외무역 허가를 받은 130여 개 무역회사 중 100여 개 업체가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고, 북한의 삼천리총회사, 룡라도무역총회사, 광명성총회사 등 대표적 무역회사는 상당수 인력을 단둥에 상

<sup>24</sup> -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 대외경제기술협력경영권을 보유한 국경기업이 인접국의 국경지역에서 전개하는 청부공사와 노동협력프로젝트 등을 의미한다.

<sup>25</sup> - 2001년부터 단둥의 대북 무역액은 2억 달러를 넘어섰으나 같은 해 연변지역의 대북 무역액은 단둥의 30% 수준인 6,833만 달러에 그쳤다.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p. 103.



주시키고 있다. 중국정부로부터 변경무역권한을 부여받은 126개 무역 회사가 대북무역에 종사하고 있다.<sup>26</sup>

단둥시의 대북 변경무역을 통한 2005년 교역량은 86만 톤, 교역액은 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26.5%, 90.9% 증가하였다.<sup>27</sup> 단둥시 발전 개혁위원회의 보고서는 단둥시가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제2 중·조우의교 건설, 경의선 철도 중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중국의 원조 프로젝트 추진, 대동항 확장과 북·중 해상운송로 재개설, 대북한 자유무역지대 설립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단둥을 통한 북·중 무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변자치주에는 투먼(도문), 사튀쯔(사토자), 난핑(남평), 구청리(고성리), 썬허(삼합), 카이산툰(개산툰), 취안허(권하) 등 북한과 연결되는 총 7개의 통상구를 가지고 있다.<sup>28</sup> 이렇게 연변지역은 많은 통상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교역규모는 단둥시에 훨씬 뒤지고 있다. 연변 지역과 접하고 있는 북한 함경북도 지역은 석탄, 철강 등의 생산기지가 고, 양강도는 목재의 주요 산지이다. 이들 자원은 연변지역과의 변경무역에 있어서 주요 거래품목이다.

변경무역을 통한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 및 철강, 목재 등으로 대부분 지하자원이거나 1차 가공품이다. 2005년 변경무역을 통한 북한의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재용해용 폐철(HS 7204), 철광과 그 정광(2601), 석탄(무연탄, 2701), 선철(7201), 철·비합금강 반제품(7207) 등

---

<sup>26</sup> - 『흑룡강신문』, 2004년 1월 20일.

<sup>27</sup> - 『신화통신』, 2006년 1월 16일.

<sup>28</sup> - 훈춘시 취안허(권하)세관은 1998년 12월 17일 중국 국무원의 정식 비준을 받아 국가 1급 세관으로 승격되었다. 취안허는 지린성에서 나진·선봉지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연길-나진-부산을 잇는 정기 컨테이너 화물선의 주요 운송통로이다. 이러한 이유로 취안허세관은 연변지역과 북한간 변경무역의 주요 창구가 되고 있다.

이었다. 폐철, 철광, 무연탄 등 동북3성 지역의 원자재 수요가 많은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변경무역을 통해 수출되는 품목은 보세무역 및 일반무역을 통해 수출되는 품목보다 상당히 많으며 거래금액의 분포도 다양하다.<sup>29</sup>

과거 북한은 변경무역을 통해 곡물과 코크스탄을 주로 수입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 곡물(정미) 수입은 줄어들고 대신 곡물과 대체관계에 있는 제분제품(밀가루)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2005년 대중국 변경무역 수입품 상위 5개 품목은 밀가루(HS 1001), 정미(1006), 합성필라멘트사직물(5407), 석탄(유연탄과 코크스, 2701), 플라스틱제 바닥재(3918) 등으로 나타났다. 화물자동차, 대두유(추출물) 건축자재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 3. 동북3성과의 무역

#### 가. 동북3성의 위상

북한의 대중 무역은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다. 지리적으로 북한과 접하고 있는 동북3성은 북·중 무역의 여러 유형 중에서 변경무역과 보세무역의 이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북·중 무역에서 차지하는 동북3성의 비중은 2004년까지 70%를 상회했으나 2005년부터 그 비중이 다소 낮아졌다. 동북3성에 대한 수출비중은 수입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 동북3성과의 무역규모는 10억 6,123만 달러로 대중 수출액의 70.9%와 수입액의 65.4%가 동북3성 지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sup>29</sup>-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 108.



<표 III-8> 북한의 대동북3성 수출입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294,612 (71.33)	263,078 (71.03)	344,327 (70.55)	541,428 (73.42)	580,691 (78.67)	785,512 (76.79)	1,004,202 (72.49)	1,061,227 (67.16)	1,005,146 (65.40)
수출	45,375 (79.17)	38,383 (92.03)	33,444 (89.87)	138,745 (83.18)	253,318 (93.52)	372,783 (94.29)	497,136 (84.88)	354,088 (70.93)	302,513 (72.23)
수입	249,237 (70.07)	224,695 (68.37)	310,883 (68.96)	402,683 (70.56)	327,373 (70.05)	412,729 (65.76)	507,066 (63.42)	707,189 (65.41)	702,633 (62.85)

주: 2006년은 1~11월 통계  
 자료: KOTRA, 무역협회 KITA.NET.

동북3성 중에서는 랴오닝과의 무역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북·중 무역에서 차지하는 랴오닝성의 비중은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비중을 합한 것보다 더 높다. 랴오닝성의 비중은 수출면에서는 다른 2성보다 절대적이지만, 수입면에서는 그 비중이 다소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헤이룽장성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하지만, 수입면에서는 랴오닝성 다음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중국 최대 유전인 다칭(大慶)으로부터 송유관을 통해 원유(2709)가 수입되기 때문이다.<sup>30</sup> 북한의 동북3성에 대한 무역 품목은 대부분 대중국 수출입 품목과 일치하지만 동북3성의 각 성별 수출입 품목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sup>30</sup> - 북한은 다칭유전으로부터 약 400km에 걸쳐 송유관(단동북부-압록강-신의주-안주 부근)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고 있다. 1976년 개통된 이 송유관은 보안 및 도난 방지를 위해 땅 속 및 압록강 바닥에 매설되어 있으며, 직경 40cm 정도로 연간 최대 400만톤의 원유 수송이 가능하다. 『요미우리신문』, 2004년 12월 14일.

<표 III-9> 북한의 대동북3성 수출입 비중 변화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 체	동북3성	71.33	71.03	70.55	73.42	78.67	76.79	72.49	67.16	65.40
	랴오닝성	37.90	36.93	32.62	38.88	47.74	46.68	43.08	35.85	33.45
	지린성	16.35	18.80	18.60	15.77	15.59	14.44	14.47	15.28	14.12
	헤이룽장성	17.07	15.30	19.34	18.78	15.34	15.67	14.94	16.03	17.84
수 출	동북3성	79.17	92.03	89.87	83.18	93.52	94.29	84.88	70.93	72.23
	랴오닝성	38.73	43.13	40.02	67.92	80.41	81.71	66.48	48.68	44.02
	지린성	37.28	47.84	49.18	14.76	12.37	12.49	17.96	20.68	27.78
	헤이룽장성	3.17	1.06	0.67	0.50	0.75	0.10	0.44	1.57	0.43
수 입	동북3성	70.07	68.37	68.96	70.56	70.05	65.76	63.42	65.41	62.85
	랴오닝성	37.77	36.14	32.00	30.39	28.81	24.61	25.95	29.93	27.49
	지린성	12.98	15.12	16.07	16.06	17.45	15.67	11.92	12.78	9.00
	헤이룽장성	19.32	17.11	20.88	24.12	23.80	25.48	25.56	22.71	24.36

주: 2006년은 1~11월 통계

자료: KOTRA, 무역협회 KITA.NET.

북·중 무역에서 동북3성의 위상은 2002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 북·중 무역에서 동북3성의 비중은 78.7%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부터는 70%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대랴오닝성 수출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랴오닝성의 비중은 2001년부터 급증하였다가 2004년부터 다시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동북3성 전체에 대한 수출비중도 같은 패턴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2001년부터 어패류와 의류·부속품의 대랴오닝성 수출이 급증하면서 동북3성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2002년 「7·1조치」 이후 중국 연해지역 성들이 북한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대북경제



제재 여파 등으로 어패류의 대중 수출이 급감하면서 동북3성의 위상도 추락하고 있다.<sup>31</sup>

## 나. 주요 수출입 품목

북·중 무역의 수출입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라오닝성의 경우, 2005년 북한의 대랴오닝성 주요 수출 품목은 의류·부속품(HS 62), 광·슬랙(26), 광물연료(27), 어패류(03), 철강(72) 등으로 상위 5개 품목이 대랴오닝성 수출의 75.6%를 차지하였다. 최근 북한은 무연탄을 비롯한 석탄, 철광석과 철강의 대랴오닝성 수출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중국 측 수요 급증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의류 수출의 증가는 단둥지역의 보세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어패류의 수출이 급감한 것은 수출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2005년 북한의 대랴오닝성 수입은 광물연료(HS 27), 일반기계(84), 플라스틱제품(39), 전기기기(85), 철강(72) 등 상위 5개 품목이 대랴오닝성 전체 수입의 45.1%로 나타났다. 북한은 경유를 비롯한 석유제품(2710)을 대부분 랴오닝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석유제품의 수입은 원유와는 달리 철저한 상업적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 석유제품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된다.<sup>32</sup>

---

<sup>31</sup> - 배종렬, “북·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변화 전망,” 『수은북한경제』 (2006년 겨울호), p. 55

<sup>32</sup> - 중국의 수출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차별적인 가격을 책정하였거나 지형, 운송비, 상품의 질에 따른 차이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원배 외, 『중국 동북3성 개발이 북·중 접경지역 산업 및 기반시설 개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 국토연구원, 2006), p. 212.



대지린성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광·슬랙(HS 26), 어패류(03), 나무·나무제품(44), 철강(72), 광물연료(27) 등으로 전체 수출의 93.6%를, 수입 상위 5개 품목은 곡물(10), 전기기기(85), 차량부품(87), 인조플라멘트섬유(54), 플라스틱제품(39) 등으로 전체 수입의 33.1%를 차지하였다. 북한의 지린성에 대한 제1위 수출품은 철광석으로 중국 기업의 무산철광(광산)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 철광석의 반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대헤이룽장성 수출은 철강(72)이 전체 수출의 94.8%를, 수입은 광물연료(27)와 식용육류(02) 등 2개 품목이 전체 수입의 92.5%를 차지해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다. 대헤이룽성 수입의 80% 정도는 광물연료이며, 수입되는 광물성연료의 대부분은 원유이다.

#### 4. 북·중 무역의 특징

최근 북·중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첫째,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 심화이다. 전반적인 북·중관계가 복원되고 긴밀해지면서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일본과 중국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 기준으로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56.7%로 높아졌다. 이런 북·중 무역의 증가는 북한 교역규모의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의 증가는 북·중 무역의 증가와 정(+)의 관계를 보여 왔다.

둘째, 수출품목구조에 있어서 북한은 주로 광물자원, 철강, 아연, 수산물, 목재 등의 기초 원자재를 중국에 수출한다. 반면, 중국으로부터는 산업생산에 필요한 연료, 기계·철강을 비롯해 식용육류와 곡물 및 각종 생활용품을 수입하고 있다. 즉, 북한은 수출품목이 제한되어 있는

I
II
III
IV
V

북한경제에 필요한 모든 제품들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경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2006년 북한의 수입총액은 20억 4,901만 달러, 이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2억 3,189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60.1%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경제에 필요한 원자재와 제품을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원자재·설비 중 중국산 비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3</sup>

셋째, 북한의 만성적인 대중 무역적자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해마다 2~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최근 2005년과 2006년에는 적자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수출품목이 제한된 북한으로서는 북·중 무역이 확대되면 필수록 대중 적자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북·중 무역이 주로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동북3성 중에서는 랴오닝성과의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북·중 무역의 여러 유형 중 하나인 변경 무역에서 랴오닝성 단둥의 위상이 지린성 연변지역을 추월하여 높아짐에 따라 동북3성 중에서는 랴오닝성의 비중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중 무역에서 동북3성은 대체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지난 2년간 그 비중은 70% 이하로 떨어져서 동북3성의 위상이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33- 양문수,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문제 소고,” 『북한경제논총』, (2004), p. 97.



다섯째, 원유 수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도입량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경제발전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대로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해마다 중국으로부터 50만 톤을 상회하는 정도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지만, 수입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2001년 대비 2006년의 원유 수입단가는 약 2.5배 인상되었다.

북·중 관계는 전통적 우호관계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더욱 밀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 원유 수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중국이 북한에 적용하던 우호가격과 같은 특혜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자국의 수급 상황,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 등 경제적 요인들을 감안하여 상업적 베이스에서 북한에 원유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I-10> 북한의 대중 원유 수입 가격의 변화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입액(천 달러)	108,757	76,468	121,004	139,326	197,676	246,898
수량(만 톤)	57.9	47.2	57.4	53.2	52.3	52.4
수입단가(달러/톤)	188	162	211	262	378	471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호.

I  
II  
III  
IV  
V



# IV

## 중국의 대북투자 · 지원 현황과 특징





## 1. 대북투자 추이

최근 북·중 경제관계에서 특기할 사항은 중국의 대북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3년을 기점으로 투자 금액, 투자추세 등에 있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시작된 중국의 대북투자는 1990년대 말까지 공식적으로 식당, 상점, 수산양식업 등 8개사에 불과하였고, 2002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에 실현된 중국의 대북투자는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외부에 알려진 사례는 10여건이 전부였다.

<표 IV-1> 중국의 대북투자 실행액

(단위: 천 달러)

	1990년 이전	1991	1994	1998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년 상반기
투자 액	790	48	270	160	610	2,600	1,503	3,526	8,999	53,690	58,740
기업 수	2	1	1	1	1	2	4	5	8	13	14

자료: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중국상무연감』 각년호; 2005년과 2006년 상반기 통계는 『연합뉴스』, 2006. 9. 4.

「7·1조치」 이후 북한 공장·기업소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비즈니스 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대북투자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sup>34</sup>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투자는 2003년에 5개사 352.6만 달러, 2004년에는 899.9만 달러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1,0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2005년과 2006년 상반기의 실제 투자액은 각각 5,369만 달러, 5,874만 달러로 급증하였다.<sup>35</sup> 이와 같이 중국의 대북투자는

34- KOTRA,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2006. p.



대부분 2005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 누계는 2006년 상반기까지 54개 사업에 투자 실행액은 1억 3,093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대북 투자를 장려하고 있고, 북한도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2004년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북한 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천명하였다. 2004년 2월 중국은 대북 투자자문회사인 “북경화려경제문화교류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대북 진출에 나서고 있다.<sup>35</sup>

중국의 대북투자와 관련한 북·중 양국의 노력은 2005년 들어와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5년 1월 첸하오민 홍콩국 제산업발전공사 이사장을 북한 정부의 외자유치 대표로 공식 임명하였다. 같은 해 3월 북한 박봉주 총리의 방중시 북·중 양국은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 투자자산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큰 틀을 확보하여 중국의 대북 투자에 대한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10월에 방북한 중국 국무원 우이 부총리는 광산개발, 제철공업, 항구개발 등 3대 중공업 분야에서 기존의 북한 중공업 단지 와 함경북도 일원에 개발 원조를 해주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같은 달 방북한 후진타오 주석은 김영남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 발전이 매우 빠르고 잠재력이 크다며 상호 이익 및 공동 발전 원칙에 입각해 양측 기업들이 여러 형식의 합작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

35- 2005년과 2006년 상반기 대북투자 합의액은 각각 1억 345만 달러, 8,634만 달러이다. 김원배 외, 『중국 동북3성 개발이 북·중 접경지역 산업 및 기반시설 개발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 국토연구원, 2006), P. 29.

36- 민관영을 통틀어 북한이 유일하게 자문권한을 인정한 회사로서 형식상 민간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정부를 대행하고 있다.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중국의 대북 투자 열기는 2004년부터 중국 내 여러 성에서 개최된 대북 투자설명회, 중국 기업의 무역 및 투자 사절단 방북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중국의 여러 성과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중국에서 대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저장성 윈저우(溫州)시 주최 대북 투자설명회(2004. 7), 랴오닝성 선양(沈陽)시 기업가협회 주최 대북 투자설명회(2004. 11. 18, 선양시 칠보산호텔),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의 요청으로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조선투자설명회(2005. 2. 25, 북경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강당)가 각각 개최되었다.<sup>37</sup>

북건성과 사천성 경제사절단은 2004년 각각 두 차례 방북하여 무역 및 투자(합작) 상담을 진행하였다. 북건성은 2004년 8월 30일과 11월 2일 두 번에 걸쳐 사절단을 북한에 보내 총 1,170만 달러에 달하는 합작 상담을 논의하였고, 사천성 기업 투자 및 무역사절단은 2004년 두 차례 방북(1차: 11월 16~20일, 2차: 12월 21~26일), 무역 및 투자관련 상담을 진행하였다. 중칭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는 2005년 북한 현지답사를 시행한 후, 3개 분야에서 대북 투자업체를 모집하였다.

현재 북한의 외자유치액 중 중국 자본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것은 북한의 전체 외자유치 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000년 이후 최근 대북투자의 대부분은 중국 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sup>38</sup>

37- 300여 중국 기업가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북한 집행국 김정빈 국장이 조선의 투자환경, 절차 및 특혜정책과 20개의 대외유치 중점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38- 2000년 이후 중국 이외의 대북투자로는 러시아의 2002년 정유관련 투자 및 2005년 금융관련 투자, 미국의 애니메이션 하청 생산 투자, 영국의 유정개발 및 담배 제조 투자, 스위스의 약품생산 투자 등이 있다. KOTRA,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 2. 분야별 투자 추진 현황

### 가. 자원개발 분야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한 대북투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산철광 개발이다.<sup>39</sup> 북한 최대의 철광산인 무산광산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노천 철광이다. 그렇지만 무산철광은 중국이 투자하기 이전에는 전력 부족, 설비 노후화 등으로 전체 공장가동률이 30% 이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중간 무산철광 공동개발은 2003년 중국 지린성 상무청과 통화강철집단(通化鋼鐵集團)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2004년 후반에 개발을 위한 정식 교섭에 들어갔고, 2005년 2월 공동개발 협정이 조인되었다. 공동개발계획에 따르면 통화강철집단(通化鋼鐵集團), 연변천지공사(延邊天地公司), 중강(中鋼)그룹의 공동출자로 중국 측이 인민폐 약 70억 위안(9억 달러)을 투자한다. 이 중 50억 위안은 광산개발을 위한 기계·설비 투입에, 20억 위안은 통화-무산간 도로·철도·송전시스템 정비에 사용하며 그 대가로 통화강철집단은 50년간 채굴권을 획득해 연간 1,000만 톤의 철광석을 캐낸다는 것이다.

최근 무산철광 개발은 이윤분배 문제로 북한 측이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40</sup> 통화강철집단(通化鋼鐵集團)의 연간 경상이익은 인민폐 10억 위안 수준으로 단독투자로 소요자금 70억 위안을 조달

---

(2006.3), p. 12.

<sup>39</sup>- 무산광산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의 미쯔비시공업에 의해 개발되었다. 무산광산의 총매장량은 30억톤, 가채 매장량은 13억톤으로 추정된다. 『홍콩대공보』, 2005년 11월 2일.

<sup>40</sup>- KOTRA, 『최근 북중관계 조망 -경제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대북위협론 해부』 (서울: KOTRA, 2006), p. 14.

할 능력이 없어 중국 국가개발은행의 융자 또는 지린성 정부의 출자를 통해 재원이 확보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sup>41</sup>

북한 무산철광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중국은 이미 소규모 투자와 인프라 정비를 통해 무산철광으로부터 철광석을 들여오고 있다. 중국은 2003년 중국 화룡(和龍)과 북한 무산(茂山)을 연결하는 남평(南坪)다리의 개건(길이 160m, 폭 12m)을 완료하였다. 같은 해 연변 천지공업 무역유한회사는 무산철광에 1억 위안 규모의 설비를 투자, 연변 남평세관을 통해 철광분을 수입하고 있다.<sup>42</sup> 지린성에서는 무산광산에서 수입되는 철광분을 통화강철공장에 공급해 지린성의 강철생산을 발전시키고자 추진해 왔다. 2005년 중반 무산광산의 철광분의 수입을 위한 선광공장을 완성한 중국은 무산광산의 철광분을 통화강철공장으로 수송하기 위해 덕화진에서 시작해 화룡역에서 끝나는 백산진-천양철도(44km, 투자액 6.6억 위안)를 2007년부터 착공·건설하여 북·중 양국이 공동 경영할 예정으로 있다.<sup>43</sup>

2006년 5월 중국 서광공무(曙光工貿)유한공사는 북한의 갑산문락평(甲山文落坪) 자철광산(양강도 혜산시 소재) 개발을 위해 북한 개선(凱旋)무역회사와 합자로 10년 계약기간의 장백서광개선광업유한공사(長白曙光凱旋礦業有限公司)를 설립하고, 장백 조선족자치현 만보강촌(萬寶崗村)에서 철 정제가루 선광공장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연간 40만 톤의 철 정제가루 선광공장 건설에 북한은 광산자원과 토지출자 명목으로 투자액의 40%인 2,400만 위안을, 중국은 채굴설비, 운송차

41- 정의준,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 분석,” 『산은조사월보』 (2007년 3월호), p. 98.

42- 중국측은 철광석을 2004년 60만톤, 2005년 200만톤을 북한으로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3,500만 위안을 투자해 무산광산-남평제련소간 13km 달하는 철광분 수송관 건설계획을 마련하였다.

43- 『길림신문』, 2006년 1월 29일.

량, 선광공장 출자를 통해 투자액의 60%인 3,600만 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다.<sup>44</sup>

중국은 북한의 금광, 동광, 몰리브덴광, 탄광 등 여타 지하자원에 대한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금광개발과 관련하여 2004년 9월 초원산동국대황금구분유한공사(招遠山東國大黃金股份有限公司)와 북한 대경추간 북한 상농산에서 채굴한 금을 산둥성 초원시(招遠市)에서 전량 정련하기로 MOU를 체결하였다. 산둥성 초금집단(招金集團)도 북한과 합작으로 雲山에서 금 채굴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몰리브덴광 개발에도 관심을 표명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sup>45</sup> 광수(廣壽)그룹유한공사는 이미 몰리브덴광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해산동광을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2006년 1월 북한 중앙경제합작국의 비준을 얻어 해산초금합영회사(惠山招金合營會社)를 설립하였다.<sup>46</sup> 이 합영회사는 중국 초금집단 산둥국대황금주식유한공사(山東國大黃金股份有限公司)와 북한 해산청년광산의 50대 50 합영으로 등록자본금 800만 유로이며 합영기간은 25년이다.<sup>47</sup> 중국 측은 해

---

44- 선광공장 건설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 공사는 장백현에 3천평방미터의 공장을 건설하고, 2007년 9월말 제품 시험생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 공사는 2008년 9월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선광공장의 연간 매출액은 2억 위안, 세전이익은 4천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OTRA, “북-중, 철 정제가루 선광(選鑛) 합자회사 설립,” 2009년 6월 14일.

45- 중강그룹은 『조선투자설명회』(2005. 2. 25)에서 북한의 알루미늄 광물 프로젝트(연 1만 톤 이상 알루미늄 정광 생산 개발 및 전량 수출 목표)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林寶광산개발유한공사는 몰리브덴광 개발을 위해 201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46- 아시아 최대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해산동광은 자연재해, 에너지 결핍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중단된 상태였다. 『길림신문』, 2005년 1월 1일; 해산동광은 아시아에서 비교적 큰 동광으로 평균 동 함유량(1.6%)은 중국 동북지역 동광석(0.8%)의 두 배에 달한다. 탐사결과 동광 150만 톤, 금 60톤, 은 1만 6천 톤 등 인민폐 1,000억 위안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산동광의 개발에 2.2억 위안(2,68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석탄개발과 관련해서는 2005년 10월 초, 중국 우의 부총리의 방북 시 중국 비철금속대기업이며 최대 광물자원 수출입회사인 우광그룹(五礦集團)은 석탄 시굴 관련 합영회사를 용등탄광 안에 설립기로 합의하였다.<sup>48</sup> 우광그룹 저우중취(周中樞) 총재와 북한 무역부상 이용남은 ‘북한 석탄분야 합자기업 설립 합의’에 서명하였으며 탄광 개발계획에 따라 1개월에 약 100만 톤의 무연탄을 채굴해 중국으로 반입할 예정이다. 이 합자기업은 북한이 경제특구 밖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설립을 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원 분야에서도 첫 번째 합작 사례이다.

지하자원 개발과 함께 중국은 북한지역의 석유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2005년 12월 노두철 부총리는 방중 시 중국의 쩡페이엔(曾培炎) 경제 및 에너지 담당 부총리와 중·조해상석유공동개발협정에 서명하였다.<sup>49</sup> 투자규모는 5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발해만 신석유층 발견 보도(2005. 10) 등을 감안할 때 중·조 해상석유 공동개발 지역은 서해일 것으로 추정된다.

47- 『投資朝鮮』, 2006년 1월 16일; <http://www.idprkorea.com>.

48- 북한 최대 탄광인 용등탄광(평안북도 구장 소재)은 한때 연간 생산량 최고 300만톤의 무연탄을 생산하였으나 현재 100만톤 정도를 생산한다. KOTRA,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2006, p. 16.

49- 『조선중앙통신』 및 중국 관영 『신화통신』, 2005. 12.

<표 IV-2>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자원개발 분야

분 야	규 모	협정(보도) 시기	중국 투자자	북 한 투자자	진행상황
금 광	미 상	『濟南日報』 2004. 9	招遠山東國大黃金股份有限公司	대외경제 추진위원회	미확인
철 광 (무산철광)	70억 위안 (9억 달러)	2005. 2	通化鋼鐵集團, 延邊天地公司, 中鋼그룹	-	북한이 분배 문제로 중단 요청
자철광 (갑산문락평)	-	2006. 5	서광공무(曙光工 貿)유한공사	개선(凱旋) 무역회사	진행중
탄 광 (용등탄광)	미 상	『길림신문』 2005. 10	우광(五礦)그룹	-	시작단계 협상개시 전
유전개발	5억 달러	2005. 12	해양석유총공사 (CNOOC)	-	진행중
동 광 (혜산동광)	2.2억 위안 (2,680만 달러)	『연합뉴스』 2006. 1	招遠山東國大黃金股份有限公司	혜산청년 광산	진행중
몰리브덴광	201만 달러	『동아일보』 2006. 8	林寶광산개발유 한공사	-	검토중
	미상	"	廣壽그룹 유한공사	-	생산개시

\*진행중: 투자가 거의 확정된 단계 또는 시험가동중이나 정식 생산에 들어가지 않은 단계

## 나. SOC개발 분야

중국은 훈춘과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의 도로·항구·지역 일체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계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은 나진항 개발과 훈춘-나선간 도로 연결 및 확장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북·중 양국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sup>50</sup>

<sup>50</sup> -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는 중국 훈춘시 동림경제무역유한공사(東林經貿有限公司)와 훈춘 변경경제협력구 보세유한공사( 훈춘邊境經濟合作區保稅有限公司)가 북한

2003년 11월 지린성 훈춘시는 ‘훈춘 나선 로항구 일체화(路港區一體化)’ 계획을 제시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북·중 지방정부간 교섭이 시작되었다. 2004년 9월 기본합의에 도달하고 2005년 9월에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2006년 1월 북한 중앙경제협력관리국의 허가를 얻었다.

북한은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에 라진항 제3호 부두의 50년간 사용권을 부여하고 제3호 부두를 확장·건설하여 그 부지에 보세기공구와 공업지구를 건설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제4호 부두 신설과 50년간 사용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나진-원정간 비포장도로를 왕복 2차선 직선도로(48km)로 개량 건설하기로 하였다.<sup>51</sup>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의 주요 업무내용은 중계화물취급, 대리수송, 보세기공구 및 관광시설 개발·경영 등이다.

훈춘시는 나선항 개발이 중국 동북지역 물류 운송에 있어 동해로의 진출 통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비록 양국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지방정부간 협상을 통해 나선지역 공동개발이 타결되었지만 사업주체인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는 민간회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sup>52</sup>

한편, 2005년 8월 단둥시 발전개혁위원회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건설과 수출가공구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sup>53</sup> 발

---

나선시 인민위원회 경제협력회사와 50대 50으로 공동출자하여 설립하였다. 북한측은 항만과 도로의 사용권을, 중국측은 3,000만유로의 자금, 설비, 건축재료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sup>51</sup> - 구체적 개발계획은 2006년 5월부터(2006년 인민폐 2.4억 위안 투자계획) 원정-라진항간 도로(중국 표준2급 도로기준) 건설을 시작으로 라진항 3호부두 개조, 5만km<sup>2</sup>의 공업단지과 보세기공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흑룡강신문』, 2005년 9월 21일; 『연변일보』 2005년 9월 15일 및 2006년 2월 27일; 『길림신문』 2006년 2월 28일 및 2006년 3월 25일.

<sup>52</sup> - 정의준,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 분석,” 『산은조사월보』 (2007년 3월호), p. 100.

<sup>53</sup> - 『연합뉴스』, 2005년 8월 17일.

I
II
III
IV
V

전개혁위원회는 현재의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는 양국간 물류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신압록강대교의 건설이 필요하고 이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sup>54</sup>

중국이 북한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할 것이라는 보도도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은 광물자원 수송을 위해 신의주에서 안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결정하였고, 북한당국이 동의하였다고 한다.<sup>55</sup> 신의주-안주 고속도로 정비에 들어가는 자금은 대부분 중국이 조달하고 북한은 건설인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중국은 지린성과 나진, 청진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중 양국은 압록강 유역에 문악발전소를 공동 건설하기로 하였다. 랴오닝성 격림사투자유한공사(格林斯投資有限公司)가 4,500만달러를 투자(총투자액 인민폐 4억위안)해 설비용량 4.2만 kW, 발전량 1억 6천만 kWh의 문악발전소를 건설하고 투자금액은 전력으로 상환받는 합작발전소 건설 체결식(2006. 5. 14)이 중국 장춘에서 이루어졌다.<sup>56</sup> 이에 앞서 북·중수력발전공사 제48차이사회(1995. 12. 1)에서 립토(중국명 망강루)발전소는 중국 측이, 문악(중국명 장천)발전소는 북한 측이 건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54- 신압록강대교의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 그러나 그 위치는 현재의 중조우의교 아래 안민(安民)과 동강(東港) 사이가 될 것이며 교량의 규모는 왕복 4차로 또는 6차로 등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5- 『조선일보』, 2007년 3월 8일.

56- 『길림신문』, 2006년 5월 16일; 『투자조선』, 2006년 5월 2일; <http://www.idprkorea.com>,

<표 IV-3>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SOC개발 분야

분 야	규 모	협정(보도) 시 기	중국 투자자	북한 투자자	진행 상황
나선 지역 개발	3,000만 유로	2005. 9	훈춘동림경제무역 유한회사, 훈춘변경경제합작구 보세유한회사	라선시 인민위원회 경제합작회사	진행중
발전소 건설	4,500만 달러 (4억 위안)	『投資朝鮮』 2006 .5	랴오닝 格林斯投資 有限公司	-	진행중

\*진행중: 투자가 거의 확정된 단계 또는 시험가동 중이나 정식 생산에 들어가지 않은 단계

#### 다. 제조업 분야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 대한 대북투자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북투자를 완료해 조업중인 분야는 컴퓨터, 슬레이트, 소비재, 자전거, 전기기구, 사료첨가제 등이다. 중국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공사(南京熊貓電子集團有限公司)와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가 합자 설립한 북·중 합작기업으로 북한 내 유일한 PC 생산업체인 아침·팬더컴퓨터합영회사(晨曦熊貓計算機有限公司)는 2002년 9월부터 컴퓨터를 생산 중이다.<sup>57</sup>

북·중 합영회사인 평양전기기구합영회사(2005년 10월 6일 조업, 중국 베이징북성효정전자과학기술주식회사와 북한 카드식적산전력계조립공장의 합영), 평진자전거합영회사(51대 49, 중국 천진디지털무역유한책임공사와 북한 대외경제합작위원회의 합영, 중국 측 65만 달러의 설비·재료·현금 투입, 상표 모란봉, 연간 생산능력 30만 대),<sup>58</sup> 은풍합영

<sup>57</sup> - 이 회사는 총투자액 130만달러, 연간 1만대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 계간지 “Foreign Trade of the DPRK”(2003.8)에 의하면 팬티엄4급 등 3종의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다.



회사(55대 45, 중국 요령화풍목업주식유한공사와 북한 은파산무역회사  
 합영, 중국 측 80만 달러의 설비·원자재·기술로 출자, 합영기간 10년,  
 2003년 계약체결, 2004년 4월 북한 정부 비준, 2005년 11월 조업, 가축·  
 가금·수산양식 사료 첨가제 생산<sup>59</sup>는 조업 중에 있다. 지린성 방직수출  
 입공사(吉林省紡織輸出入公司)와 창춘 영초과학주식유한공사가 공동  
 으로 북한에 투자 설립한 슬레이트 공장은 건축자재를, 길림식용유수출  
 입회사(吉林食用油輸出入會社)와 평양담배종이제조공장은 소비재를  
 생산 중이다.

한편 대북투자 협의가 진행 중 또는 투자는 완료되었으나 사정에 의  
 해 생산에 착수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허난성(河南省) 일타집단(一拖  
 集團)유한공사 대표단은 2003년 11월 북한의 조선금성트랙터공장을  
 방문, 트랙터 조립 등의 영역에서 합작생산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였다.  
 그렇지만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린시  
 대성(大成)경제무역유한공사와 북한 직업총동맹 산하 문수(文水)회사  
 는 극세아연분말 생산에 합의하고 중국측이 투자를 완료하였으나 판로  
 문제로 생산이 미루어지고 있다. 천진등탑도료유한공사(天津燈塔塗料  
 股份有限公司)와 평양지성명심합자회사는 페인트 생산과 관련해 협의  
 를 진행 중이다. 비록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우림경제무역유  
 한공사와 조선두만강무역회사는 광천수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였다.

---

<sup>58</sup> - 『길림신문』, 2005년 10월 29일.

<sup>59</sup> - 『투자조선』, 2006년 5월 9일; <http://www.idprkorea.com>.

<표 IV-4>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제조업 분야

분야	규모	협정(보도) 시기	중국 투자자	북한 투자자	진행상황
페인트	미상	KOTRA 2000. 7	天津燈塔塗料股份有限公司	평양지성명심합자회사	진행중
광천수	494만 달러	KOTRA 2000. 12	우림경제무역유한공사	조선두만강무역회사	미확인
컴퓨터	130만 달러	2003. 9	南京熊貓電子集團有限公司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	생산중
슬레이트	미상	『연합뉴스』 2003. 11	吉林省紡織輸出入公司, 창춘영초과학주식유한공사	-	생산중
트랙터	미상	www.koreanc.com 2004. 7	허난성(河南省) 一拖集團	조선금성트랙터	투자 안함
소비재	미상	『연합뉴스』 2005. 3	吉林食用油輸出入會社	평양담배종이제조공장	2006. 3 생산시작
자전거	65만 달러	2005. 10	천진디지털무역유한책임공사	대외경제협작촉진위원회	생산중
전기기구	미상	2005. 10	베이징복성효정전자과학기술주식회사	카드식적산전력계조립공장	생산중
사료 첨가제	미상	2005. 11	요령화풍목업주식유한공사	은과산무역회사	생산중
극세아연 분말	미상	『길림일보』 2005. 12	지린시 大成경제무역유한공사	직맹 산하 文水회사	투자완료 생산 미착수

\*진행중: 투자가 거의 확정된 단계 또는 시험가동중이나 정식 생산에 들어가지 않은 단계

### 라. 유통·운수업 분야

중국은 2004년부터 유통·운수 분야에 대해서도 대북투자를 추진해 왔다.<sup>60</sup> 평양 보통강공동교류시장(조·중평양건축장식재료시장, 보통강

I  
II  
III  
IV  
V

수입물자교류시장)은 2004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정식 개장은 2005년 6월에 이루어졌다.<sup>61</sup> 이 시장에서는 건축자재, 강재, 도색재, 농기계, 수지제품, 고무제품, 비료, 기계부속품 등 각종 수입 원자재·기계부속품·공업제품을 비롯하여 양변기 등 일부 생활소비품이 판매되고 있다. 보통강공동교류시장은 북한 계획경제의 정상화에 필요한 수입 원자재 및 제품들을 북한의 국내 기관·기업소에 도매 및 소매할 목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수입생산재 유통 종합시장이라 할 수 있다.

보통강공동교류시장은 단동시 대외경제무역국과 단동무역촉진회의 노력으로 대련의 요령태성국제무역유한회사, 단동환구실업발전수출입유한회사 등 중국의 4개사와 북한 무역성 산하 중앙수출입물자교류총회사가 100만 달러를 투자해 공동으로 건설하였다. 조선무역촉진위원회 계약서 보증을 바탕으로 중국 7개성에서 온 4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는 현금, 은행구좌를 이용한 결제, 물자 대 물자결제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온주상인들은 2004년 평양 제1백화점의 10년간 경영권을 획득(인민폐 5,000만 위안, 약 600만 달러 투자, 수입관세·소득세 5% 부과의 특혜), 절강성의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렇지만 심양 중욱집단(中旭 집단)의 온주상인 증창표 회장은 중국인 종업원 채용규제, 현지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투자를 포기하였다.

이후 2005년 5월 절강성의 동양국호무역유한회사와 조선철명무역회사는 생활잡화와 의류 등을 공동 판매하는 절상상품판매시장(평양 제1

<sup>60</sup>- 『東方早報』, 2005년 8월 22일.

<sup>61</sup>- 『홍콩강신문』, 2004년 11월 29일; 『길림신문』, 2004년 12월 30일; 『조선신보』, 2004년 10월 26일.

백화점 3개층 총면적 15,000평방미터)의 개설에 상호 합의하였다.<sup>62</sup> 2006년 4월에 정식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동양국호무역유한 회사의 부총경리인 로운회가 평양 제1백화점의 총경리를 맡고 평양 제1백화점 매장 4개층 36,000평방미터 가운데 우선 1층 매장 1만 평방미터를 임대하여 소형점포 1,000여개를 온주상인들에게 분양한다는 것이었다.<sup>63</sup> 그러나 최근 투자실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64</sup>

북·중간에는 운수분야에 대한 대북투자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2004년부터 원저우 낙청성금쾌속기차복무유한공사(樂淸盛金快速汽車服務有限公司)와 조선울림운수합영회사는 합작으로 7억 위안(약 8,500만 달러)을 운송부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철도운송을 위해서 홍콩국제산업발전유한공사, 선양철도국, 단둥철도역 단둥철도국제연합운수총공사는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와 2005년부터 협의 중에 있다.

<sup>62</sup>- 『흑룡강신문』, 2005년 9월 10일.

<sup>63</sup>- 『흑룡강신문』, 2006년 5월 1일.

<sup>64</sup>- 정의준,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 분석,” 『산은조사월보』 (2007년 3월호), p. 101.

<표 IV-5>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유통·운수업 분야

분야	규모	협정(보도) 시기	중국 투자자	북한 투자자	진행 상황
백화점 운영	600만 달러	KOTRA 2004. 8	중취그룹 (中旭集團)	평양 제1백화점	중단
	미상	2006. 4	동양국호무역유한회사	평양 제1백화점	중단
교류 시장	100만 달러	2005. 6	요령태성국제무역유한회사, 단동환구실업발전수출입유한회사 등 4개사	무역성 산하 중앙수출입물자교류총회사	운영중
운송	7억 위안 (8,500만 달러)	『연합뉴스』 2004. 11	윈저우 清盛金快速汽車服務有限公司	조선올림운수합영회사	진행중
철도 운송	3천만 위안	『흑룡강신문』 2005. 11	홍콩국제산업발전유한공사, 선양철도국, 단동철도역 단동철도국제연합운수총공사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	협의중

\*진행중: 투자가 거의 확정된 단계 또는 시험가동 중이나 정식 생산에 들어가지 않은 단계

\*협의중: 투자의사는 있으나 아직 투자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 검토 중

### 마. 수산협력 분야

중국은 2004년부터 동해안에서 북한과 수산부문에 공동협력에 나서고 있다. 중국 북경종합화학무역공사는 북한 상명무역총회사간 어업생산제휴 프로젝트를 통해 동해 북방한계선 이북인 원산항에서 50마일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권을 확보하였다. 북한은 중국 어선에 원산 앞바다를 2009년까지 5년간 개방하고 입어로 명목으로 어획고의 25%를 전자제품 등 현물로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sup>65</sup> 이에 따라 150톤급 저인망 어선 16척과 냉동선 1척, 운반선 1척으로 구성된 중국

선단이 투입되었다.<sup>66</sup>

또한 2005년 8월부터는 동해안 다른 지역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을 시작하고 있다. 랴오닝성 대련해양어업집단(大連海洋漁業集團), 절강성 주산화응원양어업공사(舟山華鷹遠洋漁業公司) 및 주산보타구원양어업공사(舟山普陀區遠洋漁業公司)와 북한 삼태성무역회사는 동해안 어업개발 프로젝트를 체결하였다. 계약에 의하면 작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총 60척의 원양어선을 투입하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2005년 8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005년 8월 현재 현지 조업어선은 22척, 그 중 원양어선은 16척이었다.<sup>67</sup>

<표 IV-6>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수산협력 분야

분야	협정(보도) 시기	중국 투자자	북한 투자자	진행상황
원산 앞바다	『연합뉴스』 2004. 11	북경종합화학무역공사	상명무역총회사	조업중
동해 먼바다	『投資朝鮮』 2005. 8	랴오닝성 大連海洋漁業集團, 절강성 舟山華鷹遠洋漁業公司 및 주산普陀區원양어업공사	삼태성무역회사	조업중

### 3. 대북투자의 특징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경제성장에 필요

65- 『연합뉴스』, 2004년 9월 7일.

66- 『연합뉴스』, 2004년 11월 16일.

67- 『투자조선』, 2005년 8월 17일: <http://www.idprkorea.com>.



한 원자재의 확보 및 동북3성 진흥계획에 따른 북·중 접경지역 연계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국의 대북투자가 단순히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진행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관련 특징을 살펴보면서 함께 논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의 대북투자는 동북3성과 남방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북 투자에 나서고 있는 동북3성의 비교적 큰 업체로는 선양 중쉬그룹, 지린성 방직수출공사, 창춘 영초과학주식유한공사,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 등이 있다. 남방지역 기업으로는 항저우 와하하집단, 허난성 일타집단, 산둥성 초금집단, 2004년 방북하여 상담을 진행한 복건성과 사천성 기업 등을 들 수 있다. 동북3성 기업의 대북 투자는 지리적 인접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남방기업의 북한 진출은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중국 기업 가운데 대북 투자자의 대부분이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와 랴오닝성의 조선족 상인들 위주였다.<sup>68</sup> 그러나 동북3성 개발이 추진되면서 최근 대북투자에 나서고 있는 중국 기업들 중 상당수는 랴오닝성 단둥시와 지린성 정부와 연계되어 있다. 대북투자의 중심이 지린성 및 단둥시 정부와 연계된 중국 상인(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조선족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었다. 중국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훈춘시의 한족화정책, 장백산관리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백두산 관리권의 지린성 이전, 연룡도(연길, 용정, 도문) 일체화정책 등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위상 약화를 초래할지도 모른다.<sup>69</sup>

<sup>68</sup>- 또한 길림대학 동북아 연구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쉬위지(徐文吉) 교수는 2004년 원저우 상인의 대규모 북한 진출을 계기로 더 많은 중국 국내기업이 대북투자의 촉진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sup>69</sup>- 배종렬, “북·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변화전망,” 『수는 북한경제』 (2006년 겨울

둘째, 중국은 대북 투자에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지하 광산자원 개발에 가장 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투자업체 중 상당수는 북한 광산개발에 관심을 두고 북한과의 합작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하자원 개발에서는 철광을 비롯하여 금광, 동광, 몰리브덴광, 탄광 등 모든 분야에서 투자를 추진 중이다.

이것은 북한의 거대한 광산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이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를 유인하고 있고, 동시에 경제 급성장에 따라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광물자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북3성 지역의 원자재 부족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기보다는 급성장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서 향후 5~10년간은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자원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대북투자 분야가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SOC개발, 유통·운수업, 수산협력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컴퓨터, 슬레이트, 자전거, 전기기구 등을 북한과의 합작을 통해 생산 중이다. 유통·운수업 분야에서는 평양 제1백화점 운영이 추진된 바 있고, 보통강공동교류시장이 운영 중에 있다. 나선지역 개발과 관련 나진항 3호 부두 확장과 나진-원정간 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압록강 유역에 문악발전소를 공동 건설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북한 측 투자환경의 제약 때문에 여전히 경제성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대북투자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대북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나

---

호), p. 67.



지방정부의 사전 방침과 결정을 반영하여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제조업 분야에서는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어 대북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지하자원 및 SOC개발, 수산협력 등에 있어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원 속에서 대북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중국의 대북 투자는 현재까지 주로 보상무역 또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북한 기업의 경영권을 요구하기보다는 북한의 투자제도 및 거래관행에 순응하는 형태를 취함에 따라 합작방식의 보상무역형태의 대북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방식은 투자한 설비만큼 생산제품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낮고, 투입산출주기가 짧으며 상호 해산도 간편하기 때문이다.

합작투자의 사례로는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와 북한 무산광산 간 합작, 산둥성 초금집단과 양강도 혜산청년동광산 합작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중국 측 기업이 트럭 20대(15톤급), 지게차 3대, 디젤 100톤을 제공하는 대신 북한은 매월 무연탄 1만 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한 북진성의 북한 무연탄광산에 대한 투자는 보상무역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수산협력의 경우 어획고의 일부를 현물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것과 수력발전소 건설에서 투자 금액을 전력으로 북한이 지불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가 단기간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북·중 양국의 정책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외화보유 증가로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 국제적으로는 위안화 절상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외자유치정책에 주출거(走出去) 정책을 추가해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북한도 경제개혁 조치 이후 지리적으로 인

접해 있고,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비록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측면이 있으나 아직까지 대북투자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실제 투자에 있어서도 협상 중단 사례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 투자 기업들은 생산초기단계에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 점유율도 북한 투자유치액의 40% 이하로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sup>70</sup> 그렇지만 북·중 양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양국 경제관계의 심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 4. 대북지원 실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중 경제관계는 대체로 정치·군사적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이 관례였다. 이런 전략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조건 하에서 양국의 경제관계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지원은 다소간 파고를 겪기는 했지만 지속되어 왔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항상 특혜를 부여해 왔다.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무상원조는 2001년 6,910만 달러를 정점으로 최근 3년간은 1,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상원조의 비중(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무상원조는 중국의 대북 수출에 포함되어 있음)은 2001년 12.1%에

<sup>70</sup>- KOTRA, 『최근 북중관계 조망 -경제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대북위협론 해부』, p. 13.



서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1.7%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2005년 대북 무상원조는 3,810만 달러로 늘어나 대북 수출에서의 비중은 3.5%로 높아졌다.

<표 IV-7>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무상원조  
(단위: 백만 달러)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대북수출	328.7	450.8	571.6	467.3	627.6	799.5	1,081.2
무상원조	48.4	27.6	69.1	16.0	10.9	14.6	38.1

자료: 중국해관총서 통계사.

한편 중국은 비공식적(공식적 지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이란 용어 사용)으로 북한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북·중 정부는 양국 관계 악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관계 복원에 노력하였다. 중국은 1994년부터 대북원조를 재개한 바 있고, 1996년 5월 홍성남 총리가 북경을 방문하였을 때 대북원조를 포함하는 「경제기술합작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는 향후 5년간 중국은 북한에 곡물 50만 톤, 석유 130만 톤, 석탄 250만 톤을 절반은 무상으로, 절반은 국제가격의 1/3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비공식적 대북 지원은 1990년대 후반 북한과 중국이 과거의 우호관계를 회복하고, 이후 양국의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고위 인사들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해 북·중 우호협력관계가 한층 긴밀해짐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말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해 무상지원하기로 약속했거나 제공한 비공식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9년 6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규모 외교 사절단의 방중 시 중국은 식량 15만 톤과 코크스 40만 톤(총 5,000만 달러 상당)을 무상 지원하였다. 2001년 장쩌민 국가 주석이 방북했을 때는 식량 20만 톤과 디젤유 3만 톤을 무상으로 지원(톤당 가격을 옥수수 100달러, 쌀 270달러, 디젤유 300달러로 적용할 경우 옥수수와 디젤유 제공시 2,900만 달러, 쌀과 디젤유 제공시 5,400만 달러 상당)하기로 하였다. 2002년에는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4. 15)을 맞아 북한에 5,000만 위안(약 600만 달러)에 상당하는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04년에는 남포시 대안친선유리공장 신축비로 2,40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5년 10월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일 위원장과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약 20억 달러의 장기 원조를 표명하였다.

양국 정상회담 및 고위 인사의 상호 방문시 중국이 북한에 약속한 지원의 상당 부분은 공식적인 지원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동시에 상당 부분은 누락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국의 대북지원에서는 공식적 지원보다는 비공식적인 지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지도 모른다.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북한은 중국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해서 대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최근 중국의 대북 무상지원(공식적, 비공식적 지원) 추이와 규모에서 드러나듯이 지원에 따르는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무상지원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해마다 1,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미미한 규모이다. 2004년의 경우, 중국의 대북 지원액 3,860만 달러(공식적 무상원조 1,460만 달러, 유리공장 신축비 무상지원 2,400만 달러)는 한국정부와

I
II
III
IV
V

민간의 대북 지원액 2억 5,620만 달러의 15.1%에 불과하다. 중국의 대북 지원규모는 한국의 규모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 대북 지원에 따른 영향력 면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다.

V

북·중 경제관계 확대의  
영향과 대응방안





# 1. 경제관계 확대의 영향

## 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1) 긍정적 영향

북핵 문제 등으로 국제적 고립에 처해있는 북한에게 있어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는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경제성장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 무역을 통해 비효율적 산업에 투입되었던 생산요소가 보다 효율적인 산업으로 재배치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은 수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sup>71</sup>

지난 1999년 이래 북한경제는 저성장이기는 하지만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대부분 학자들은 북한경제가 성장을 하게 된 주된 동인으로 외부지원과 대외무역의 증가를 들고 있다. 사실 이 기간 북한 내부에서 경제성장을 이끌만한 산업생산에서의 증가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농업부문에서 곡물생산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서비스 및 유통분야에서의 거래가 활성화된 것이 눈에 띄는 변화이다. 따라서 최근 북한경제의 저성장에는 대외무역의 증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외무역의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기계, 설비, 원자재, 연료 등을 다량 수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북한의 산업생산 및 고용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에 처한 북한 산업은 중국으로부터의 물자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장 산업가동률 저하로 나타나

<sup>71</sup>- 조명철 외, 위의 책,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p. 190.



게 된다. 북·중무역이 증대되면 될수록 북한의 산업생산과 고용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sup>7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무역의 확대가 북한의 산업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는 다소간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 중에서 기계, 설비 및 원자재의 수입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고, 원유를 포함한 연료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수입액의 증가와는 달리 산업생산에 직결되어 있는 생산요소의 수입량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중 무역액의 증가가 북한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다.

한편 중국은 자원개발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외자유치를 통해 생산현장의 설비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생산증대를 이루고, 동시에 새로운 기술습득도 가능하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는 북한산업의 생산 증대와 기술이전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북한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경제발전에서 소외되었던 동북3성 개발은 인접국가인 북한에게는 지역경제협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동북3성간 운송·물류 인프라의 연결, 자원의 공동개발 및 활용과 같은 각종 프로젝트들이 본격화 될 경우 중국 접경지역 북한 도시들의 경제활동 및 산업 생산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아직은 소규모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는 동북3성의 개발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

<sup>72</sup>- 위의 책, p. 193.

북·중 경제관계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북·중 무역의 특징 중 하나인 변경무역을 통해 다양한 생필품과 식량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다. 이렇게 유입된 중국산 제품들은 북한 내 유통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된다. 물자가 부족한 북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생필품 조달이 여의치 않다면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질 것이다.

이런 북·중 경제관계 확대는 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의 통합과정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중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은 결국 한국이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출해야 할 부담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을 자국의 영향권 아래 묶어 두겠다는 의도가 없다면 한국을 대신해서 행해진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대북투자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2) 부정적 영향

북·중 경제관계 확대의 부정적 영향은 북한경제의 지나친 대중 경제 의존 때문에 발생한다. 남북교역을 포함할 경우 북한의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0년 23.5%에서 2004년에는 39.0%로 높아졌고, 2006년에도 39.1%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동북3성 개발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 및 대북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북·중 교역 증가로 인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한국은 북한의 대외교역(남북교역 포함)에서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개성공단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2006년에는 31.1%로 높아졌다. 그러나 남북교역에는 대북지원과 같은 비상업적 거

I
II
III
IV
V

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상업적 거래만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낮아지고, 중국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일본의 비중은 북한 핵문제 이후 대북제재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감소해 북한경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졌다.

<표 V-1> 북한 대외무역에서 한·중·일의 비중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중국	23.5	27.6	25.4	32.8	39.0	38.9	39.1
한국	20.5	15.1	22.1	23.2	19.6	26.0	31.1
일본	22.3	17.8	12.7	8.5	7.1	4.8	2.8

주: 남북교역을 포함한 북한의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호.

북한의 대중 주요 수입품목인 에너지, 철강, 화학제품, 기계류 등은 북한 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 품목 대부분은 북·중 사이의 유리한 관세, 저렴한 물류비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낮다. 이 중 에너지, 화학제품, 기계류는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러시아나 기타 국가로부터 일부분을 수입 대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입단가 상승이 예상되어 북한의 수입국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 중 많은 부분은 다른 시장으로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거나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북한이 일본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한국 등 다른 나라 시장으로의 대체가 용이한 것과는 대비된다. 내수 위주의 산업구조인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에는 내

수용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증가가 따르게 된다. 북한의 경우 수입 다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수입 증가는 대중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속에서 당분간 북한의 대중 무역(수입) 의존도의 완화는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북한경제는 중국의 경제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중국경제의 부침에 따라 북한경제의 명암이 엇갈리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산업생산에 긴요한 원유 등 연료와 원자재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북한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나친 대중 경제 의존으로 경제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국가마다 자국의 실정에 맞는 경제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제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이 높은 국가는 자국의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특정국의 경제정책이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런 상황 하에서는 북한 경제개발을 위해 중국과 경합 또는 경쟁하는 국가가 있을 경우 공정한 게임룰이 적용되지 않고 중국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정책을 결정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최근 중국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및 중국 투자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통해 북한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매체들은 북한 시장이 비록 여러 가지 투자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임의 노동력을 가진 미개척 시장으로 투자 매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sup>73</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대북 경제전략이 변함에 따

<sup>73</sup>- “중, 북한시장 공략 장기계획”, 『연합뉴스』, 2004년 5월 31일; “중 기업인 ‘북한은 잠재력 큰 시장’”, 『요녕조선문보』, 2004년 11월 2일.

I
II
III
IV
V

라 중국의 기업들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물류 등 기간산업 부문에 투자를 계획·실행하고 있다.

2005년 후진타오의 방북시 중국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수용할 경우에 약 20억 달러의 대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경의선 북측 구간의 복선화 및 현대화 사업부문에 대한 10억 달러 투자 및 서해안 유전 공동 개발사업 등 총 30억 달러의 대북 프로젝트가 상당 부분 합의되었다는 설도 있다.<sup>74</sup>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로 집행된 중국의 대북 투자의 절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다.

현상만 두고 본다면 중국의 대북 투자는 전략적으로 북한을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중국의 대북 투자방식(합작투자 또는 보상무역)에서 보듯이 중국은 북한 기업의 경영권 인수 또는 자원 독점의 차원에서 대북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동북3성 개발과 관련한 자원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측면에서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대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북 투자에 따르는 북한 시장에 대한 장기적 선점 및 대북 영향력 증대를 간과할 수는 없다. 동북3성 개발과 맞물린 대북 인프라 구축형 투자의 확산에 따라 중국은 북한과의 육로 수송망 연결을 통해 북한 시장 선점 및 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예상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 투자 증대는 ‘경제난에 따르는 북한 붕괴’라는 시나리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75</sup>

---

74- 『시사저널』, 2006년 1월 31일~2월 7일.

75- 중국의 대안유리공장 건설 무상지원은 우방귀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북 이후 북한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북한경제는 중국경제와 긴밀히 연계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될 수 있다. 이 경우 선진국과의 연계가 약화되기 때문에 선진국형이 아닌 낮은 수준의 경제 및 산업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선진화 속도가 늦추어지게 되어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중 경제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이미 북한시장에는 중국산 소비재가 넘쳐나고 있다. 북한의 대중 의존이 심화될수록 북한의 내수시장은 중국제품의 소비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중 의존심화는 북한의 자체적인 자본축적을 통한 소비재 생산증가 → 소비증가 → 투자증가 → 자본축적의 선순환 발전구조 형성을 저해하고, 대신 소비재의 수입대체 → 생산중단 → 자본축적 실패 → 재투자 중단이라는 악순환구조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sup>76</sup>

## 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최근 북·중 경제교류 확대 속에서도 남북경협은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렇지만 북·중 경제관계의 확대가 지속될 경우 전반적인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에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어찌면 북한은 북·중 경제교류 확대 과정에서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경쟁을 유발하면서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생각이 이런 것이라면 남북경협은 북·중 경협 확대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즉, 남북경협

의 6자회담 참여 유도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4년 3월 2일.  
<sup>76</sup> 우상민, 『북·중 경제 관계 현황과 전망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중심으로-』 (서울: KOTRA, 2005. 12), p. 42.

I
II
III
IV
V

의 절대적인 규모는 북·중 경협 확대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화를 유도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국제경제질서에 조속히 편입되기를 기대한다.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는 이런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로 북한은 산업기동력과 성장 잠재력이 제고되고, 산업설비의 현대화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경제난 해소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북한의 국민소득과 구매력이 증대되어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은 남북경협의 확대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비록 북·중 경제교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양국간 경제관계의 추이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북한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경쟁에서 우리의 주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는 대북협상에서 남북경협의 레버리지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남북경협의 구조적인 제약 및 북·중 경제관계 진전의 속도가 남북경협의 진전 속도보다 빠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 남북경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우선 북·중 무역 증가율이 남북교역 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무역의존도의 상대적 비중 감소가 예상된다. 북·중 교역의 대부분은 상업적 거래인 반면, 남북교역의 30% 정도는 비상업적 거래이기 때문에 남북교역의 상업적 거래의 증가율은 북·중교역의 증가율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또한 북한의 대중 주요 수입 품목은 중국제품의 낮은 가격, 저렴한 물류비 등의 이점을 감안하면 한국 또는 제3국으로의 수입선 전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투자면에서도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 투자를 실행하고 있으나, 우리의 대북 투자는 3대 경험 사업을 중심으로 제한된 지역에서만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대북 투자진출이 확대될 경우 북한의 북쪽 지역은 중국이, 남쪽 지역은 한국이 진출하는 “남남북중(南南北中)” 분할구도로 북한이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중국은 일부 광산과 항만에 대한 장기간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고,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에도 나서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자원 공급기지과 소비시장으로 전략하여 중국 경제에 예속될 수도 있다. 더구나 북한 개발 과정에서 중국 중심의 산업 경제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 확대·발전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염두에 두는 우리의 한반도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북·중 경제관계 확대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북한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남북경협이 동반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남북경협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따라서 우리가 남북경협 확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남북경제공동체 및 통일한국의 실현이 지연될 수 있다. 북·중 경제교류의 확대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맞설 수 있는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

## 2. 정책적 대응방안

### 가. 북한 대외경제 다각화 유도

#### (1) 북한 수출입선 다변화

북·중 경제관계 긴밀화에 따라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은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중 의존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

I

II

III

IV

V

한 수출입선의 다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대중 주요 수입품목 중 일부를 한국산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 중 기계류, 화학제품(플라스틱 등) 등은 품질면에서는 한국산이 우위에 있으나 가격면에서는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에게는 세제 감면 등 혜택과 북한에게는 유리한 조건 제시 등을 통해 이들 제품의 대북 반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완화를 위해서는 북·일 무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북·일 관계 회복과 정상화에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북·일 무역의 감소는 북한 핵문제 및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따르는 북·일 관계의 악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따른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어패류 및 섬유·의류제품의 수출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전환되고 있다.

북·일 관계 정상화 이전이라도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폐지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가동, 노력해야 한다. 북·일 무역이 증가하면 그만큼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은 완화되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대북 경제적(무역) 영향력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 (2) 러시아 등 제3국 활용

북한이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북·중 경제관계 확대에 따르는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를 약화시켜 나갈 수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북한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 연계해서 북한지역에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러시아의 극동개발 프로젝트 및 북·러 경제협력에 참여해 러시아와 북한간 경제관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해야 한다.

북·러 관계는 2000년 2월 『북·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이 체결되면서 정상화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7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시 양국은 11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적 관계를 적극 발전시키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2001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양국은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8개항의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하였다.<sup>77</sup> 2005년 11월 한·러 정상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은 한·러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일정 부분 북한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하였다.

북한은 2002년 4월 경제대표단(단장 조창덕 부총리)이 극동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여 임업, 공업,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양국간 가장 유망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북·러 양국은 수산업, 농업, 건설, 임업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논의해 왔다. 북한은 러시아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으며 수산업 분야에서 러시아 기업과 합작사업도 진행 중이다. 북한 벌목공은 임업협정에 따라 아무르주 등에서 목재 벌채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 전력 공급을 요청한 바 있고, 최근 러시아 RAO EES(통합에너지시스템사)는 극동지역의 전력을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남북한은 동북아 철도협력과 연계하여 남북철도의 연계 운행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철도 연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러시아는 TSR(시

77- ‘모스크바 선언’ 중 3개항은 양국간 경제관계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양국간 무역 확대,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문제,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북한 산업시설의 재건 및 관련 외자도입 방안, 철도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I
II
III
IV
V

베리아횡단철도)-TKR(한반도종단철도)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 TSR-TKR 연결과 관련 러시아는 ① 북·러 국경인 핫산-두만강역을 통해 TSR-TKR을 연결하고, ② 연결에 소요되는 20~2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TSR-TKR 연결과 관련해서 ① 북한 측 구간 확정과 관련한 이견, ② 북한 측 구간의 현대화 비용부담 및 재원조달 등의 문제가 장애 요인이다.

북한과 러시아(극동지역 및 시베리아)의 연계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필요와 중장기적으로 상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미 양국이 추진 중이거나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이런 분야의 사업에는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농업·임업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북한 산업시설 현대화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 TSR-TKR 연결 프로젝트 등이 있다.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이 참여하는 3국간 협력체계의 모색이 중요하다.

북한 노동자를 활용한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이 가장 현실성 있는 양국간 협력사업이다. 현재 북·러 양자협력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업협력에 남한의 자본이 참여하는 3자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북한 노동력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은 농업 분야에서 공동 협력방안(3자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북·러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공동어로 및 수산 분야에서의 협력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산업시설 현대화의 최대 관건은 소요 재원의 조달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 산업시설의 현대화에는 한국이 자본을 제공하고, 러시아가 기자재, 시설 및 전문인력을 투입하며,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3자

협력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 산업시설 현대화와 관련한 남·북·러 3자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한의 자금지원으로 러시아산 기계와 설비를 구매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북한이 해외로부터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러시아로부터 송전 방식을 통해 공급받는 것이다. 남한, 북한, 러시아는 에너지 교류에 대한 기술적 측면 및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선 건설을 통해 북한에 공급하는 것을 논의한 바 있다. 러시아의 대북 송전에 대한 반대급부가 확보된다면 북·러 전력협력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이 참여하는 3국 협력을 통해 극동지역의 발전자금을 한국이 제공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북한과 러시아가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을 통해 이르쿠츠크와 야쿠츠크 가스관을 한국으로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는 남·북·러 3국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남북철도 연계사업에는 중국보다 오히려 러시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러시아의 자루비노와 청진간에 광궤를 부설하여 TSR과의 접근망은 이미 구축되어 있다. 남·북·러 3국은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기술을 결합하여 우선 러시아와 북한의 노후화된 철도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철도운송 인프라의 공동개발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남북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경원선의 복원과 수요증대를 감안한 복선화와 시설개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나. 남북경협 적극 추진

### (1) 마스터플랜 마련·시행

북·중 경제관계 확대에 따른 북한의 대중 의존 심화를 우려한다면 남북경협 증진을 통해 우리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는 것이 대

I
II
III
IV
V

응 방안이다. 남북경협을 증진을 위해서 정부는 북한경제의 회복과 재건을 위한 남북경협 마스터플랜(또는 대북 경제지원·협력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의 남북경협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남북경협 마스터플랜은 시행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의 입장을 적절히 수용, 대북 지원과 협력을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터플랜에 의한 사업 시행은 우리의 부담 능력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한다.

남북경협 마스터플랜의 시행에 따르는 재정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확충은 필수적인 시안이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증액뿐만 아니라 해외차입 등을 통한 협력기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협력기금의 지원용도 확대, 대북 투자에 대한 지분투자제도 도입 등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최소 국가 일반예산의 1% 정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편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북경협 마스터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 지원 및 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 및 공감대 확산이 필수적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론의 분열은 남북경협 증진을 위한 남북경협 마스터플랜의 시행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남북경협 마스터플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 확산, 초당적인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2) 남북한 자유무역 추진

남북한간 거래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민족내부거래로서 규정되어 무관세로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불능력의 한계, 각종 제한품목, 통제품목, 승인절차 등으로 인해 교역자유화는 요

원한 상태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기때문에 사실상 남북한 거래는 국제적인 제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남북한간 실질적인 자유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요인들을 제거해 남북한 교역 자유화를 이룸으로써 남북교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간 상호 인정하고 있는 민족내부거래를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미 체결된 쌍무적, 다자적 협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남북교역 자유화에 장애가 되는 조항은 수정하거나 적극 대처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도 남북한 민족내부거래의 성격에 맞게, 그리고 무관세 거래가 목적하는 취지에 맞도록 수출입 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 남북 교역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법과 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처간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간소화해야 한다. 향후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국가에 대해서 한국기업이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협상을 벌여나가야 한다. 북한과 공식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남북한간 완전한 자유무역 추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자유무역 추진의 일환으로 남북한 접경지역에 북·중 접경지역에서와 유사한 형태의 통상구를 개설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내에 통상구를 개설해 소규모이지만 상시적으로 자유롭게 물자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
II
III
IV
V

### (3) 남북 연계 인프라 확충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북한 내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 이외 북한지역 진출이 매우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남쪽과 연계시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내 인프라는 대부분 개보수 및 현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북한 인프라 확충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부분 우리의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활용도, 효율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북한 인프라를 정비, 보수하도록 한다.

제1차 남북총리회담(2007. 11. 14~16, 서울)에서 남북은 경의선 철도·도로 공동 이용을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추진에 합의하였다. 북측의 철도·도로 개보수를 통한 공동 이용은 남북한 물류수송의 해운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물류비를 경감시킴으로써 남북경협 확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과 함께 통행열차가 경의선 철도를 상시적으로 운행하기로 합의되어 12월 초, 개최되는 실무접촉 등을 통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남북을 연계하는 물리적 인프라가 다양하게 확보된다면 남북한간 물자이동의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남북교역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간 해상운송(인천-남포)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시 운임은 1/4로 절감(1TEU당 800달러에서 200달러)되고, 운송일수는 5~6일에서 1~3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대륙철도 및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결되면 북방경제 개척을 통한 한반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 (4) 제조업의 대북 진출 지원

북한의 산업구조는 중국의 원자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보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북한은 전형적인 내수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물자 수입의 증대만큼 수출 증대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원유, 코크스, 화학원자재 및 식량 등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지만 북한의 지불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이 북한의 외자유치나 산업구조 재편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78</sup> 동북3성의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외자도입을 통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북한 중화학공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이 지연될 경우 동북3성 개발계획이 추진됨으로써 북한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

한국은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도 수출 위주의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대북 진출을 지원·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북한의 수출산업 육성, 중국의 북한 자원개발 및 기타 분야에 대한 대북 투자에 맞설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을 확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경협을 통한 우리 제품의 북한 시장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대북 진출기업의 생산제품 및 대북 반출품목의 북한 시장 진출로 북한 소비재 시장의 중국 제품 의존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번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사항 중에는 남포와 안변지역

<sup>78</sup>- 이종운·김은국, “중국 동북3성 개발이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과 향후 과제,” 『세계경제』 (2005. 1), pp. 71~72.

I
II
III
IV
V

에 조선협력단지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에 조선협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우리 조선업계에 원가절감효과를 가져와 우리 조선산업이 계속해서 세계 1위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선산업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면 당장 북한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up>79</sup>

### (5) 대북 개발지원의 적극 추진

중국의 대북 무상지원의 영향력은 한국에 비할 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 중 일부를 북한산업 개발지원 형태로 전환해 나가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단순지원과 함께 개발지원을 병행, 확대해야 할 것이다.

북한산업 개발지원 방식은 제10차 경추위에서 남북이 합의한 새로운 방식의 경험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방식의 경험은 북한에 대해 경공업 관련 원자재를 지원하고 대신 북한자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생산된 자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sup>80</sup> 보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발자원(예: 석탄)을 북한 화력발전소에 제공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방식으로 중국의 북한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

남북한간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에 따라 남측은 2007년 중,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섬유, 신발, 비누 등)를 유상으로 제공하

---

<sup>79</sup>- 우리 업체가 우선 추진하게 되는 북한과의 조선산업협력은 저임의 노동력이 필요한 선박블록공장 건설이다. 연산 20만톤 규모의 선박블록공장 건설시 약 1~2천명의 노동력이 요구된다.

<sup>80</sup>- 남북한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2007. 5. 22 발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협력대상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기로 하고 하였다. 8월에 제1차 경공업 기술협력단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11월 16일 현재 약 50%의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였다. 북한은 지하자원 생산물, 개발권, 처분권 등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남북은 단천지역 3개 광산(검덕, 룡량, 대흥)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7. 28~8. 18, 10. 20~11. 7)하였다.

중국의 대북투자가 주로 북한 북부지역에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개발 중인 개성공단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대북투자를 둘러싼 중국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면서 개성공단 1단계 개발사업의 조기 완료 및 2, 3단계 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하도록 한다. 우리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북 에너지 지원·협력사업 전개 및 북한 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대북투자가 필요하다.

### (6) 국내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 착수

남북경협과 관련한 사업의 효과가 남쪽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국내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을 남북경협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한다. 개성공단사업의 취약점(원산지 문제, 전략물자 반출 제한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남측(경기 북부지역)에서 전개하여 남북경협의 국내 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한다.

경기 북부지역은 남북한간 지리적 인접성 및 저렴한 북한 노동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에서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고, 동시에 개성공단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지역이다. 특히 첨단산업(예: LCD클러스터 조성 등)의 경우 경기 북부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산업단지를 조성, 개성공단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부품 생산을 경기 북부지역에서 담당하는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I
II
III
IV
V

남북한 접경지역(경기 북부지역 등)에 남북교류협력단지(물류기능, 생산기능, 각종 업무 및 지원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계획적으로 조성, 경의선 등 남북한 연결 인프라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남북협력공간을 특구로 개발할 수 있다. 남북경제교류협력특구는 물류기능, 생산기능, 각종 업무 및 지원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동해선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효과가 남측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강릉-고성(남측) 철도 부설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한다. 강릉-고성(남측) 철도가 완성될 경우 금강산관광사업에만 한정되었던 동해선 남북 철도연결사업의 효과는 남측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편익으로 확대될 수 있다.

#### 다. 남·북·중 3국 경제협력 모색

동북3성 개발 및 중국의 대북 투자는 남북한 경제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구조와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단순히 남북한 양자간 차원에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보다는 북한이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접국인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과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이 상호 협조하고 공유할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남·북·중 3국의 공동 이익 창출토록 해야 한다.

남북한과 중국이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는 북한의 예상 개방 후보지인 신의주 지역(행정특구)을 남북한과 중국의 3자 협력을 통한 개발을 들 수 있다. 남·북·중 3국은 관광부문과 철도부문에서의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 동북3성(특히 연변지역)과 북한의 백두산 및 기타 지역(나진·선봉지대, 칠보산 등)을 연계하는 북·중 관광코스에 한국이 참여하거나, 백두산(장백산)-금강산-설악산-제주도 등 중국

동북3성과 남북한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육로 및 해로 관광루트의 개발도 가능하다. 경의선과 중국을 통과하는 철도망을 연계하는 남·북·중 3국 철도협력사업을 추진, 경의선 북측구간 현대화 작업에 한국과 중국의 공동 참여도 바람직하다. 남·북·중 3국간 철도협력(TKR-TCR연결)으로 북·중 접경지역의 발전 및 중국 동북3성과 한반도를 잇는 경제권이 형성된다.

또한 북·중경협과 연계한 남북경협을 추진, 남북경협의 우회적·간접적인 증진 효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한다. 북·중경협의 일환으로 중국이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지역 경제재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남북한과 중국의 3자가 참여하는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sup>81)</sup>

남·북·중 3국 경제협력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 및 경제예속화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시키게 된다. 동시에 한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 등으로 인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지 약화를 보상할 수도 있다. 북한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협력구도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동북아 지역협력 촉진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확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I
II
III
IV
V

<sup>81)</sup> 임강택, “동북아 국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108.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주영. 『중국의 동북3성 재건과 우리의 진출방향』.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4.
- 김영봉·박영철. 『북-중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서울: 국토연구원, 2005.
- 김원배 외. 『중국 동북3성 개발이 북·중 접경지역 산업 및 기반시설 개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 국토연구원,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중국경제년보』.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북한경제포럼 편. 『현대북한경제론』. 서울: 오름, 2005.
- 우상민. 『북-중 경제 관계 현황과 전망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중심으로』. 서울: KOTRA, 2005.
- 이영훈.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은행, 2005.
-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2. 논문

- 김원배. “신의주-단동 연계 지역개발 방안의 모색.” 『통일문제연구』. 제34호, 2000년.
- 김종오. “중국자본의 북한 진출에 대하여.” 『중소연구』. 2006년 봄호.

- 배종렬. “북·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변화 전망.” 『수은북한경제』. 2006년 겨울호.
- 양문수.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문제 소고.” 『북한경제논총』. 2006년.
- 오동윤. “중국 동북3성 개발계획의 시사점.” 『KIEP 세계경제』. 7권 3호.
- 우경식.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과 대북 지원확대.” 『통일한국』. 2006년 5월호.
- 이중윤·김은국. “중국 동북3성 개발이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과 향후 과제.” 『세계경제』. 2005.
- 임강택. “동북아 국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임금숙.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14권 1호.
- 정의준.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 분석.” 『산은조사월보』. 2007년 3월호.
- KOTRA. 『최근 북중관계 조망 -경제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대북위협론 해부』. 서울: KOTRA, 2006.
- KOTRA.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서울: KOTRA, 2006.

### 3. 기타

- KOTRA. 『경제속보』.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 『교도통신』.
- 『길림신문』.
- 『대공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東方早報』.  
『시사저널』.  
『신화통신』.  
『연변일보』.  
『연합뉴스』.  
『요녕조선문보』.  
『요미우리신문』.  
『조선신보』.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중국상무연감』.  
『文匯報』.  
『흑룡강신문』.  
『投資朝鮮』.

<http://www.idprkorea.com>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흙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영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흙	저	5,000원
2007-15(1)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11)-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3	東北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4	東北亞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변영: 평가와 전망		9,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 ):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I ):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9,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2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2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200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 (2007)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운,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남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홍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송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흙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흙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열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근,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rn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이 책은 국제산림경영인증(FSC)마크를 획득한 무염소 펄프 친환경용지 띠또레뜨지(표지)와 친환경소재로 만들어진 재생용지 이라이트지(본문)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에 유해한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KINU** 연구총서 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